주체90(2001)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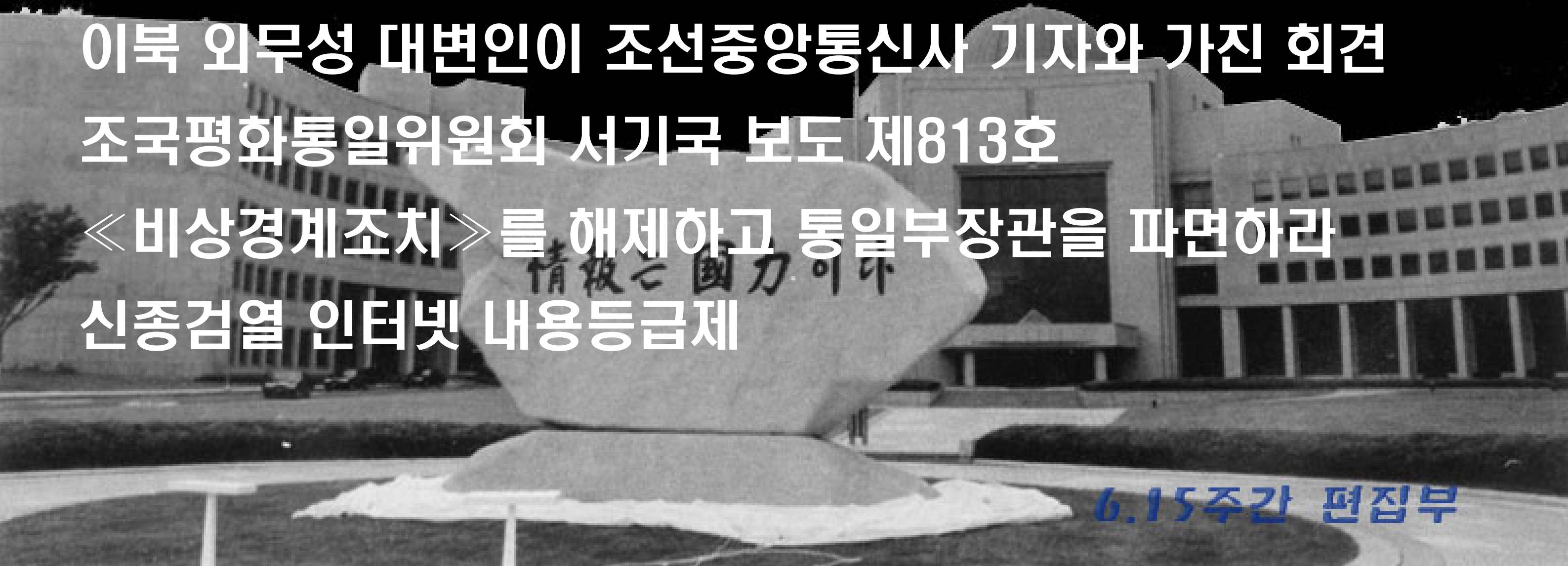
6.15Weekly 제23호 (11월 23일~11월29일)



국정원, 그 추악한 과거와 위험한 음모

11월 26일 부쉬의 폭언,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겠다≫

노작 - 3.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이북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가진 회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813호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통일부장관을 파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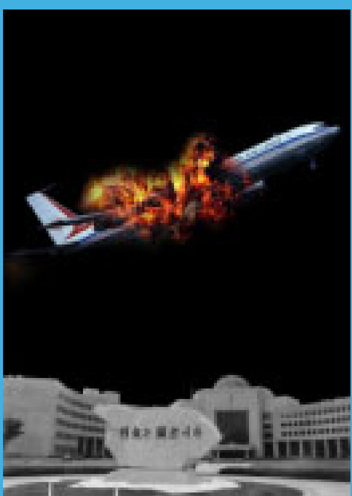
신종검열 인터넷 내용등급제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23호 (11.23~11.29)



≪21세기 태양≫ 총서를 발간하며

6.15주간 편집부 통보(편집부 보도 2호)

어느덧 21세기 첫 해 주체 90년이 저물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역사적인 주체 91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6. 15주간≫편집부는 21세기 첫해를 의의 있게 총화하는 한편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 60돌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기획 중 하나로서 ≪21세기 태양≫총서를 발간합니다.

≪21세기 태양≫총서는 21세기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생애를 담은 피디에프자료집 10권을 말합니다.

1권 ≪대학시절≫은 사상이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대학시절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집으로서 김일성방송대학강좌 특강을 기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권 ≪종자론≫은 주체문예혁명의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종자론을 중심으로 70년대 주체문예혁명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3권 ≪속도전≫은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70년대에서 최근까지의 사회주의건설영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4권 ≪철학의 대가≫는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사상이론활동을 그 해설과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5권 ≪선군영도≫는 신묘한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를 통해 ≪고난의 행군≫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권 ≪음악정치≫는 노숙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끈 2대 무기라 할 수 있는 음악정치에 대하여 해설해줍니다.

7권 ≪영생≫은 충효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숭고한 도덕의리를 담고 있습니다.

8권 ≪천출명장≫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과 조미대결전을 어떻게 승리로 영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권 ≪통일의 구성≫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더불어 6. 15공동선언을 중심을 통일위업에 공헌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권 ≪정치원로≫는 국제적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외교활동과 함께 진보적 인류로부터 ≪21세기 태양≫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 태양≫총서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이 21세기 첫해에 열정적으로 전개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선전사업의 총화로서 우리가 그간 새롭게 개척한 인터넷 선전전의 모든 성과를 집약한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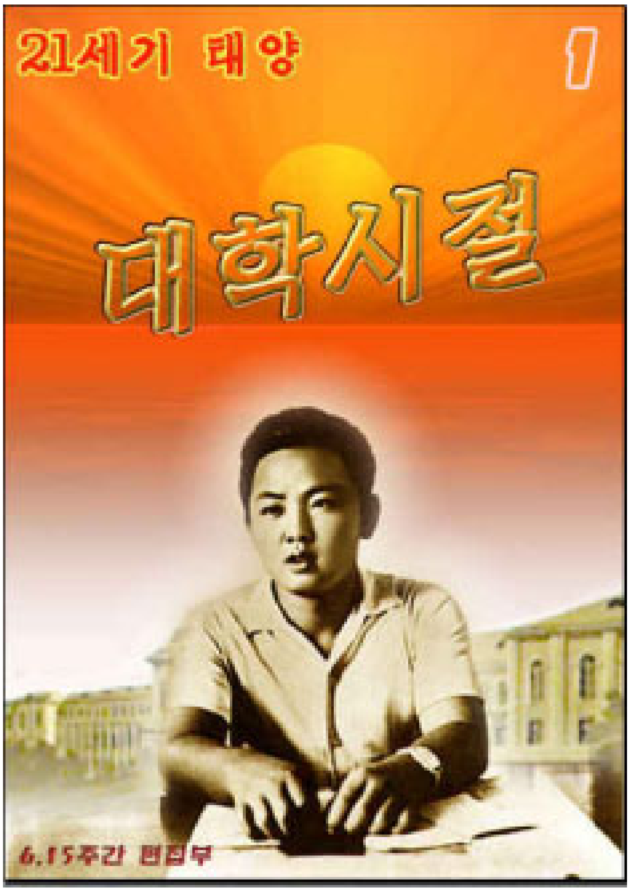
우리는 운동가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디에프총서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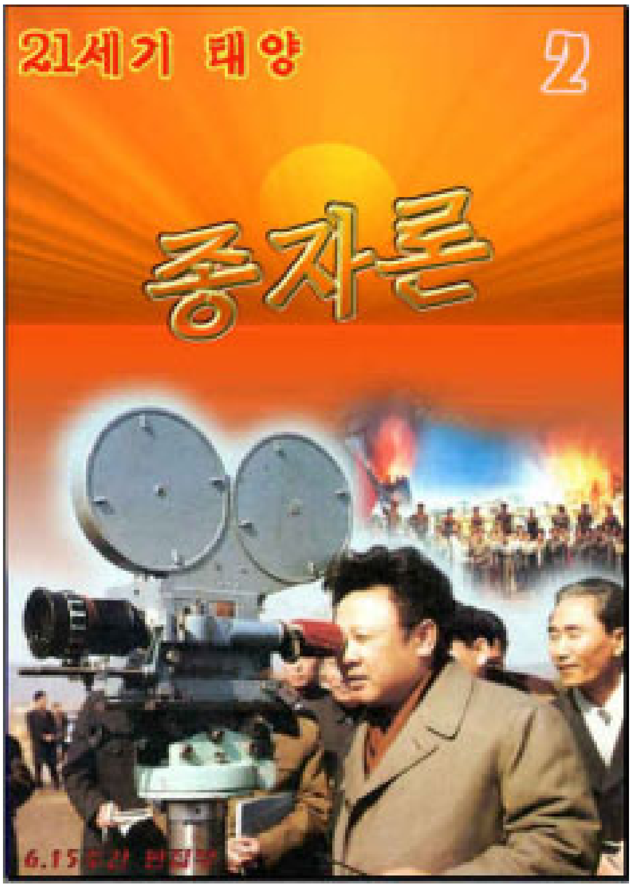
우리는 ≪인터넷구국의소리≫와 ≪통일여명≫의 각종자료집을 활용하며 ≪21세기 태양≫총서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속도전의 방식으로 전개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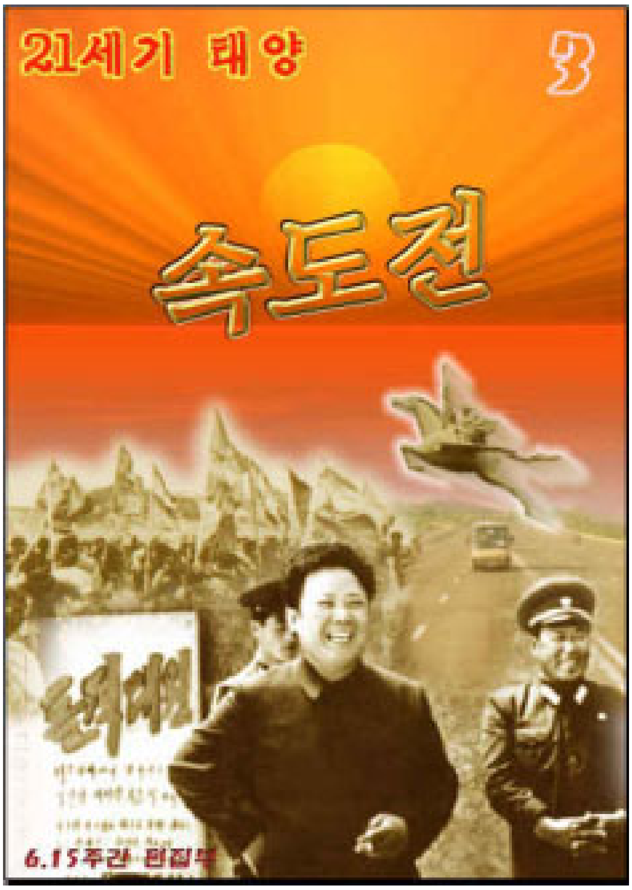
이번에 내놓은 ≪21세기 태양≫은 주체 90년판으로서 향후 내용과 편집을 개선한 새로운 판이 계속적으로 발간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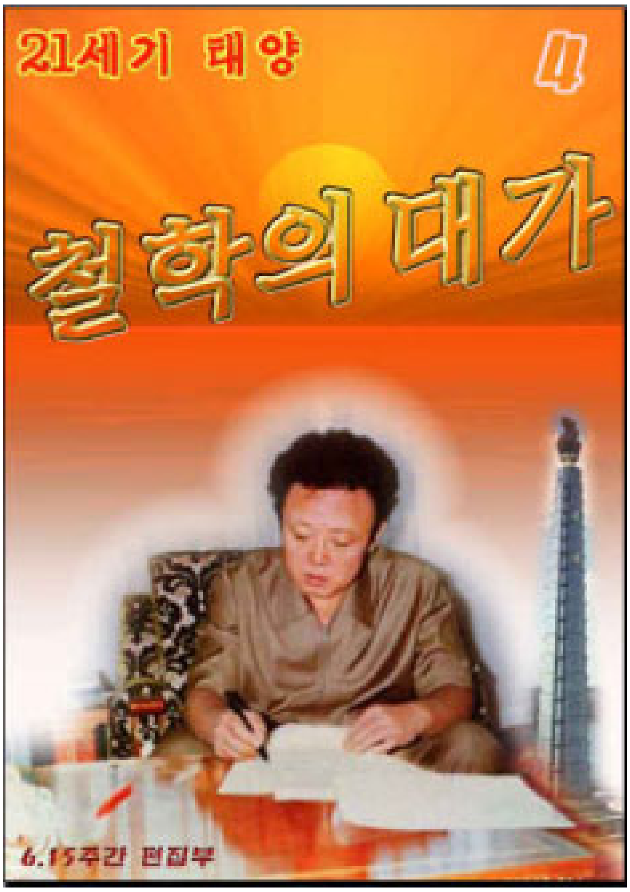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선전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불변의 신념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것입니다.

6.15주간 편집부
주체 90(2001)년 11월 15일
서울


21세기 태양
1
대학시절
6.15주간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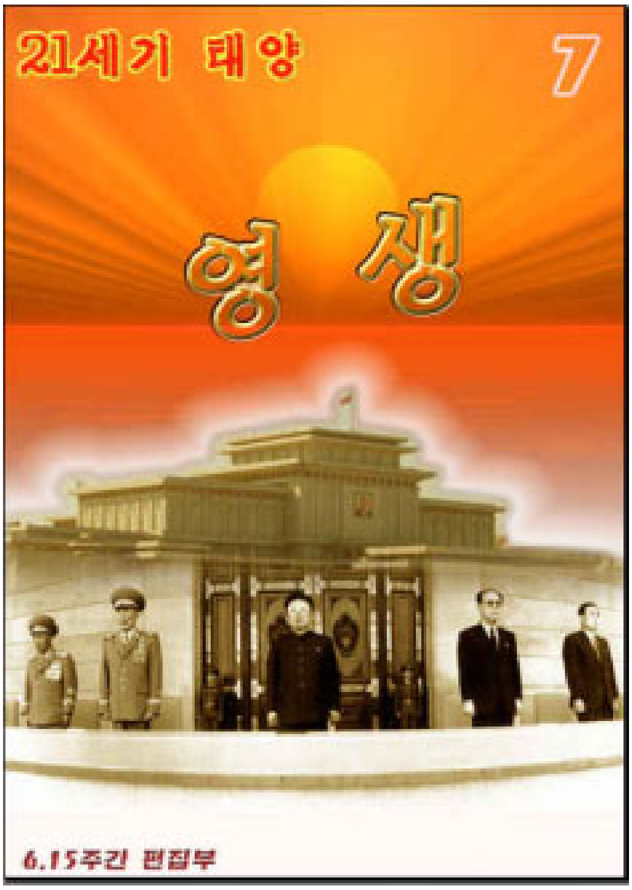

21세기 태양
2
종자론


21세기 태양
3
속도전
6.15주간 편집부


21세기 태양
4
철학의 대가
6.15주간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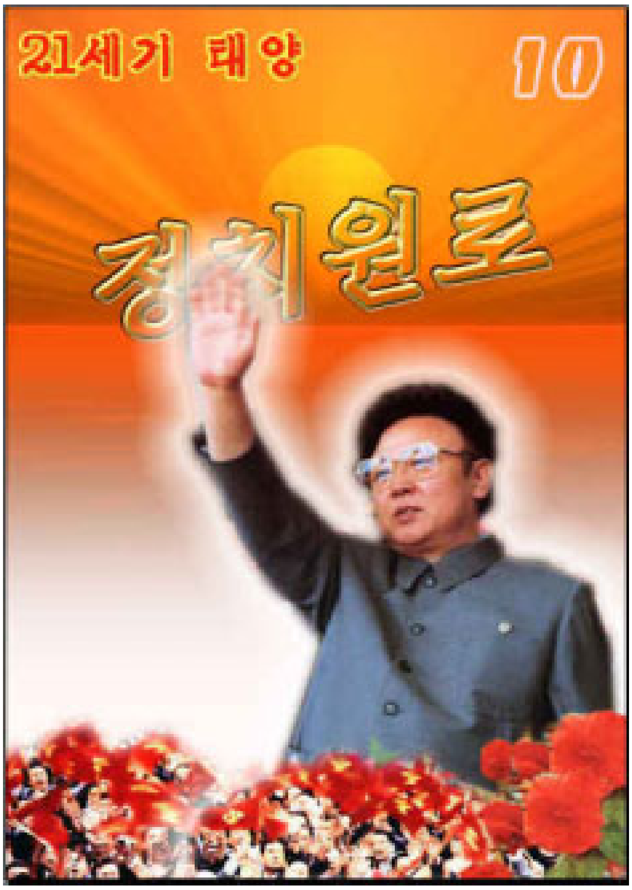

21세기 태양
5
선군영도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21세기 태양
6
음악정치


21세기 태양
7
영 생
6.15주간 편집부


21세기 태양
8
천출명장


21세기 태양
9
통일의 구성
6.15주간 편집부


21세기 태양
10
정치원로



3.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김일성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주체50(1961)년 9월

동지들!

총결기간에 남조선 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조선에서의 혁명과 반혁명과의 력량 관계를 혁명력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인민대중으로부터 고립된 반혁명세력이 군사테로의 모험적 수단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남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의 주요 추세입니다.

작년 봄에 미제국주의 식민지 제도 하에서 부패와 학정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여 새 정치와 새 생활을 요구하여 영웅적 항쟁에 궐기함으로써 리승만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구국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였으며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였습니다.

4월 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습니다

항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항쟁을 계기로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국주의에 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의 인민 봉기와 그 후의 사태 발전은 미제국주의가 어떠한 류혈적 탄압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면정권의 마지막 시기에 남조선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는 극도로 첨예화 되였습니다. 인민생활은 참을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 갔으며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지 않고는 빈궁과 무권리, 식민지적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남북 교류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요구하며 남북협상을 요구하는 군중적 투쟁이 힘있게 발전하였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남북회담과 교류를 제의하여 나섰으며 광대한 인민대중이 이에 호응하여 일어났습니다. 대세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인민대중에게 급속히 유리하게 진전하였습니다.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반동은 파국에 처한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여 보려고 파쑈적 군사독재를 수립하는 모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남조선에서의 군사독재정권의 수립은 조선에서 미제의 지위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것은 죽음에 림박한 자들의 절망적인 발악에 불과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남조선의 식민지 제도를 결코 구출할 수 없습니다. 파쑈적 군사통치는 도리여 인민들의 투쟁을 가일층 격화시킬 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종국적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은 일체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암흑의 천지로, 대중적 테로와 학살이 감행되고 있는 인민의 도살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 군사 정권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체시켰으며 진보적 언론, 출판 기관들을 모조리 폐쇄하였으며 벌써 10만여 명에 달하는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안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군사집단의 내부모순과 갈등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남조선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대중적 기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한 결코 달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군사통치배들이 ≪개혁≫이니, ≪자립적 경제건설≫이니, ≪민생의 구출≫이니 하는 말들을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여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조선의 사태발전은 그들의 이와 같은 구호들이 허공에 뜬 공담이라는 것을 더욱더 폭로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습니다. 미제국주의 식민지통치가 철폐되지 않는 한 그 누가 정권 기관에 들어앉든지 간에 남조선정권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에도 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복종시켰으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완전히 폐쇄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한 남조선 경제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남조선공업은 파산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압박으로 인하여 민족공업은 더욱더 령세화되어 가고 있으며 부단히 파산 몰락하고 있습니다.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는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체들이며 지금 그 80% 이상이 휴업하거나 조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 약간 있다고 하는 경공업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기자재와 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주요 부문은 현지에서 보충적으로 미국고용군대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군수 공업입니다. 이러한 군수 공업의 주인은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예속자본가들입니다.

남조선시장은 바다를 건너 온 미국상품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남조선 수출 총액의 20배에 달하는 수입 총액 중에서 미국 ≪원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여전히 자립적 공업이 없는 락후한 농업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업의 파산과 함께 남조선 농촌경리도 여지없이 파괴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여전히 봉건적 지주제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여지≫는 그 대부분이 다시 지주, 부농의 수중에 집중되였으며, 농민들은 가혹한 봉건적 착취를 받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인하여 남조선 농업은 그 발전이 정체되였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황폐화되였습니다. 해방 전에 비하여 경지면적은 20만 정보가 축소되였으며 파종면적은 40만 정보나 축소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침략군대는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10만 정보 이상의 토지를 군용지로서 강탈하였습니다. 공업이 파산되고 농촌경리가 극도로 령세한 조건에서 농업기술은 말할 수 없이 락후한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파괴와 침체는 생산의 심한 쇠퇴를 가져 왔습니다. 1960년에 알곡생산량은 해방 전 1937년에 비하여 3분의 2로 감소되였습니다.

경제의 파산,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능력 있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만 이상의 근로자들이 만성적인 실업 및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조선 정권은 해마다 예산의 70% 이상을 군사비의 지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짜내기 위하여 조세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비의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의 격화는 근로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1961년 7월 현재로 1949년에 비하여 통화량은 206배로 불었으며 물

가는 126배로 올랐습니다. 전후 7년 동안에 남조선인민들의 조세 부담은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로동자들은 하루에 10~18시간의 고역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임금은 최저생활비의 3분의 1도 못됩니다. 광범한 농민 대중은 지주와 고리대의 채무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전후 기간에 농민들의 부채액은 20배로 격증하였습니다. 매년 수만 호의 농가가 파산하여 리농하고 있으며 공업이 령락한 농촌 인구를 흡수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들의 대부분은 류리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16년간에 걸친 통치의 결과이며 미국 ≪원조≫가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미국군대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기본적 장애이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조선에서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온갖 책동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 넣었으며 남조선 천지를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습니다. 미국 강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무수한 애국적인 인민들과 무고한 겨레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동족 상잔에로 내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입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적 관료배들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제국주의침략의 안내자로, 그의 충실한 동맹자로 되고 있습니다. 지주계급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 밑에 농민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예속자본가들은 미국의 상품과 자본을 끌어들이며 우리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여 자기들의 상전에 팔아넘기며 미국고용군대에 군수품을 조달함으로써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요구는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동지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 수 없으며, 혁명 군중을 군게 결속할 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혁명적 당의 령도가 없었으며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각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군부상층의 파쑈분자들에 의한 권력탈취를 막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반대하여 효과적인 반격을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 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조직되여야 할 근조인민의 정당은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결시킴으로써 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며 미국 침략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산주의 침략≫을 막는다는 구실 밑에 우리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결코 동족상잔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사상과 정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지장으로 될 수 없으며 더우기 전쟁의 원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말이며 그들의 남조선강점과 전조선침략기도를 은폐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간판에 불과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준비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전인민적 항쟁에 궐기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로동자들은 태업과 파업을 조직하여 적들과 군수생산과 군수물자수송을 방해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동포들을 학살하며 략탈하며 모욕하는 미국군대의 강도행위를 결정적으로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침략군대에 대한 일체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들에게 쌀 한 알, 물 한 방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침략자들로 하여금 격분한 인민들의 항쟁 앞에서 공포에 떨게 하며 그들이 우리 땅에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침략군대를 하루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남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일체 예속적인 군사, 경제적 조약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미국의 식민지적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단결하여 결정적인 반미투쟁에 궐기할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 배겨내지 못할 것이며 남조선에서 쫓겨나고야 말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민주주의개혁을 수행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남조선군사정권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고 인민들의 수족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군사통치자들은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수많은 애국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고 있으며 심지여는 신문기자들에게 미제의 철거와 외세를 배제한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사형을 언도하는 횡포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를 분쇄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언론, 출판, 결

사, 집회, 시위 및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치 자유가 회복되여야 합니다. 군사정권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는 야수적 태도는 즉시 중지되고 체포구금된 모든 애국적 정치범들과 무고한 주민들은 즉시 석방되여야 하며 미제의 특무, 민족반역자들이 처단되여야 합니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남조선에서 당면한 민주주의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구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 대중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출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수 없습니다.

남조선농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봉건적 착취 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토지는 응당 밭갈이하는 농민들의 소유로 되여야 합니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또는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줌으로써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위업에 기여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토지의 대가를 물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강점군대에 의하여 군용지로 략탈된 토지는 즉시 농민들에게 반환되여야 합니다.

철저한 민주주의적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새 땅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땅이 적은 농민들과 리농한 실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각종 고리대 착취는 금지되여야 하며 농민들이 진 토지 채무와 빈농민들의 일체 부채는 폐기되여야 합니다.

조선농촌에서 봉건적 관계의 청산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길을 열어 주며 농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공업의 발전에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적 민족공업이 없이는 인민의 복리증진도, 국가의 독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철도, 운수 및 은행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외래 제국주의와 국내매국세력의 강제적 토대를 분쇄하고 민족 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가들의 경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원료와 자금 및 판로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에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8시간 로동제와 사회보험제의 실시, 임금 인상 및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시급히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로동자의 임금은 우선 최저생활비의 수준에까지 올려야 합니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현저히 경감하고 각종 가렴잡세를 철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에 얼마 되지 않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과학연구의 조건과 자유가 보장되여 있지 않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미국문화가 인민의 의식을 중독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한 민족 문화는 짓밟혀 조락되고 있습니다. 과학자, 문화 예술인들은 반동적 미국문화의 침습에 반대하고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건설에 용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함으로써 학령아동들의 완전취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성인교육제도를 광범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며 문맹을 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생활의 무참한 령락과 보건사업에 대한 집권자들의 범죄적 무관심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전염병과 만성 질환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민주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녀성들을 천대와 멸시를 받는 굴욕적 처지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하며 녀성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을 사회적 로동에 광범히 참가시키며 그들에게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70만의 고용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통수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그 지휘자는 미국장군들입니다.

조선군대의 절대 다수는 군복을 입은 농민이며 로동자입니다.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국군≫에 강제로 끌려나온 근로청년들입니다.

남조선군대는 북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동포들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자유와 생존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자기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탄을 퍼부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국군≫의 원쑤가 없으며 로동자, 농민의 군대인 인민군대는 남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형제들과 싸우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국군≫의 진정한 원쑤는 우리의 강토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그 앞잡이들입니다.

남조선 군대는 인민의 애국적 운동과 민주주의적 운동을 탄압하며 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맹목적인 도구로 되는 것을 그만 두고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의 군대로,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으로부터 ≪국군≫의 통수권을 탈환하여야 하며 반인민적인 병역제를 철폐하고 파쑈적 군사 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국군≫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은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책에 빠지지 말고 인민의 편으로 돌아서야 하며 미국 지휘관들과 ≪국군≫ 상층 반역 도당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민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전취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래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농민전쟁, 3·1운동, 6·10만세사건, 광주학생사건을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은 면면히 계속되여 왔으며 이러한 투쟁들은 억압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쳐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가장 공고한 반공정권이라고 떠벌이던 리승만정권도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에 의하여 전복되고야 말았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어서야 합니다.

동지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참혹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파쑈 독재를 전복하고 나라

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 후 16년 간에 걸치는 고난의 력사를 통하여 남북이 분리되여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남북조선의 힘을 합치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외에 남조선에서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잠시도 지연시킬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조선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명백합니다. 당은 시종 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조선 자유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의 단독선거로써는 결코 사태를 개변할 수 없습니다. 북반부 인민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이 다 같이 참가하는 전조선적인 선거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며 오직 이러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가 반드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써 실시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우리 민족의 내부적 문제입니다. 제국주의침략군대에 의하여 국토가 강점되고 있으며 외세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인민들의 자유의사의 표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일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조선에서 진정한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조선 전 지역에서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은 어떠한 구속도 없이 그들의 정강과 정치적 견해를 인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조건들이 보장되였을 때에만 조선인민은 진정한 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안은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그것을 찬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추종하는 매국적 반동세력만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방해하고 있으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원쑤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남북총선거의 실시를 위한 투쟁에 용감히 나서야 합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국 침략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여,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비록 간고하며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으나 대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변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될 날은 더욱더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이 민족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인민들의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 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혁명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죠아지, 청년학생, 지식인 그리고 민족부르죠아지까지도 조국의 분렬과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공통한 민족적 리해관계에 의하여 련결되여 있습니다. 이 모든 계급들과 계층들의 력량을 튼튼히 집결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공동의 원쑤를 물리치고 해방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로동계급의 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통일전선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초로 되여야 할 것입니다.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학생, 지식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반미구국항쟁에 더욱 광범히 끌어들이며 그들로 하여금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과 밀접히 결합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 밑에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각 계층들을 집결하여야 하며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력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의 계급적 처지와 사회적 지위, 정견과 신앙 여하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에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죄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나선다면 우리는 그를 열렬히 환영할 것이며 조국이 통일된 후에도 끝까지 그를 포섭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식민지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 민족해방혁명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날 외래 침략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수억의 인민들이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억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의 청산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이 위대한 시대에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어찌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감수할 수 있으며 민족적 모욕과 학대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결하여 침략자들을 구축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미국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한다면 적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타승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구축될 것이며 조국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달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2. 오의성과의 담판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

유격대는 구국군의 행패가 두려워 밤에만 행군하고 낮에는 행군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선사람이 살아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다시금 상정되었다.

나는 용단을 내려 구국군 전방사령인 오의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왕덕림이 간도 땅에서 떠나가버린 후 구국군의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다. 오의성을 잘 설복하면 ≪김명산사건≫과 이광별동대참살사건으로 하여 동만 땅에 동만 땅에 빚어진 유격활동의 경직상태를 종식시키고 우리 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이 생겼다.

나는 오의성과의 담판을 성사시키지 위하여 반성위와 함께 진지한 의논을 하였다. 반성위는 나의 결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긍정해 주면서도 오사령한테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중국사람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조선사람이 가서는 오의성과 같이 자존심이 강하고 편견이 심한 사람을 휘여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성위는 오사령이나 채사령을 돌려세우자면 그의 배후에서 모사노릇을 하는 이청천이 작간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하였다.

나는 반성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장애가 있든 가야겠다고 고집하였다.

≪이청천도 조선사람인데 반공분자이긴 하지만 설복을 잘하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지요. 그 사람과 나는 서로 구면입니다. 길림에서 3부통합회의를 할 때 그와 이야기도 여러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청천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구면, 초면이 무슨 상관이 있소? 그런 사람들이 뭐 구면, 초면을 가리는 줄 아오? 게다가 오의성은 벽창호라지 않소. 승산이 없거든.≫

반성위는 나의 모험을 저지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나에겐 안도에서 우사령을 설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사령을 돌려세웠는데 오의성이라고 왜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세기와 더불어

≪우사령과 담편을 할 때는 류본초선생이 참모장으로 있지 않았소. 그게 좋은 배경이었단 말이오.≫

≪그런 배경은 오의성부대에도 있습니다. 진한장이 거기서 비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장을 하는 호진민도 공작원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의 말때문에 그만 자가당착에 빠졌다. 내가 든든한 배경이라고 역설한 진한장한테서 얼마전에 결정적인 응원을 바란다는 요청의 편지가 왔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 개인의 힘으로 오사령과의 동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되었다고 전제를 둔 다음 ≪**김일성**동지가 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조직에서 가급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반성위도 이 사연을 알고 있었다.

≪혁명의 전도가 아직 요원한데 그렇게 모험을 해서야 되겠소? 제발 심사숙고해 주시오.≫

반성위는 끈덕지게 나를 설복하였다.

≪자기의 몸을 개인의 몸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소. 자칫하면 제2의 이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가 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동무들만은 살아서 끝까지 조선을 위해 싸워줘야 할 게 아니오!≫

반성위의 그말은 나를 적이 감동시켰다. 그러나 나는 공동전선의 대망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반성위가 훈춘현으로 떠난 다음 동만의 각현에 있는 유격대 대표들은 왕청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통일전선 문제를 심각하게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도 중심을 이룬 안건은 구국군과의 동맹문제였다. 이를테면 오의성, 채세영, 사충항 등의 구국군이 집결되어있는 라자구에 누가 담판을 가느냐 하는 문제였다.

나는 구국군의 집결처에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회의는 호위성원이 100명 정도 따라가는 조건에서 나의 라자구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의성을 찾아가는 경로가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의성과 담판하자면 먼저 진한장이나 호진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실정부터 요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진한장은 오의성의 비서장인데다가 고정한 사람이어서 사무실에만 배겨있었지 밖에 잘 나다니지 않았다. 설사밖에 나온다고 하여도 조선사람들과 접촉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전날 내가 관여하던 공청조직의 성원이었고 또 그때 서로 맹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에게 편지를 쓰고 뒤이어 오의성과 채세영에게도 서한을 보내 우리가 라자구로 가는 취지를 밝혔다. 발신인 이름 옆에는 격을 갖추느라고 네모나게 생긴 큼직한 도장도 찍었다.

편지를 발송한 다음 라자구 지방의 혁명조직을 통해 오의성 부대의 동태를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좋았다. 라자구의 지하조직들은 구국군이 시내 입구에 ≪조선인 반일유격대를 환영한다!≫는 구호를 써붙인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다.

나는 선발된 1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라자구로 떠났다. 새 군복을 입고 새 총에 새 가죽가방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해가는 우리 부대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인솔하였다.

태평구에 도착한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라자구 입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오의성 부대에 전령병을 파견한 다음 거기서 회답을 기다리며 하룻밤 유숙하였다.

다음날 라자구에서 담판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다. 오사령이 이처럼 담판에 응해나서기까지에는 진한장의 보증이 큰 힘을 냈다. 내 편지를 받고 오의성에게 자기가 김대장을 아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오의성은 그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공산당인데 너는 어떻게 되어 잘 아는가? 너도 공산당이 되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진한장은 김대장이 동창생이기 때문에 알고 지낸지가 퍽 오래다고 하였다.

≪너의 동창생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봐야 하겠다.≫

우리는 구국군이 우리를 억류하고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대처하여 즉시 응원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훈춘에서 온 1개 중대를 태평구 아랫마을에 배치한 다음 나머지 50명만 데리고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라자구 시내로 들어갔다.

유격대를 마중하러 나왔던 진한장이 구국군 지휘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담판중에 나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조동욱과 연락병 이성림도 목갑싸창을 차고 진한장을 따라갔다. 지휘부에는 국민당계통의 부관들이 많이 와 있었다.

오의성은 수염을 길게 드리운 풍채 좋은 사나이었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호랑이 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도 하고 차도 마시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날은 격식을 차려 깍듯이 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중국식 예절만은 지키지 않았다.

나는 첫인사로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많은 부대들이 일본군에 투항할 때 사령님네 부대가 항일에 나선 것을 애국적 장거로 높이 평가합니다.≫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오의성은 그말을 듣자 입가에 미소를 짓고 부관을 시켜 차를 가져오게 하였다.

≪내 김대장이 일본놈과 잘 싸운다는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당신네 군대는 수가 적으면서도 일본놈과 잘 싸우는데 우리는 수더구가 많지만 당신네들처럼 일본놈과 잘 싸우지 못해. 우리 사람들한테서 들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군대들이 알뜰히 새 총을 메구 왔다는데 그걸 몇자루 우리한테 있는 낡은 총과 바꾸지 않겠소?≫

담판은 오의성의 이런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사치고는 아주 까다로운 인사였다. 한쪽으로는 추어올리고 한쪽으로는 응해나서기 곤란한 흥정을 붙여 상대방의 속을 떠보려는 오사령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쓴밥 단밥 다 먹어본 외교의 능수이고 능구렁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천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전방사령이 새총 몇 자루가 탐나서 예의도 없이 첫 대면에 그런 주문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바꿀 게 있나요. 그런 것쯤은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사령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면서도 넌지시 꼬리를 달았다.



세기와 더불어

《그거 뭐 궁색하게 그런 놀음을 할거나 있습니까. 일본군대와 한바탕 싸우면 될 터인데. … 정 요구한다면 그까짓 거 거저 줄 수도 있습니다.》

오의성은 수염을 내리쓴 다음 다른 각도에서 또 들이댔다.

《그런데 당신네 거 공산당이란 건 무엇인가? 저 진한장이란 사람은 공산당이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난 통 믿을 수가 없거든. 주보중도 공산당인데 내 고문으로 있을 때 보니까 무얼하는지 꾸물꾸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군. 그래서 그 삶을 쥐내깔렸지.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상공당도 마스고 다닌다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공당을 마스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꾸며낸 선전이지요.》

《그럼 김대장도 상공당에 절을 하오?》

《난 상공당을 마스지도 않고 또 거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절도 하지 않지요. 그래 오사령은 절을 하는가요?》

《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절을 안하는 거나 오사령이 절을 안하는 거나 같고 같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힌 오의성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까처럼 또 수염을 쓸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런데 당신네 공산당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한이불 밑에서 자고 남의 재산을 막 빼앗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나는 담판의 성패여부가 이 대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으며 오의성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던진 미끼를 재치있게 받아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도 나쁜 사람들이 꾸며낸 선전이지요. 공산주의 물을 잘못 먹은 몇몇 사람들이 지주의 땅이라면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지주라는 것들이 소작인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선심이라도 써서 먹을 것을 주어야지 저만 잘 살겠다고 아닌보살을 하니 이게 도리가 됐는가요? 지주들이 식량만 주면야 무엇때문에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살 길이 막히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옛날 중국에도 태평천국이라는 난리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아마 그렇게 돼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의성은 동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럴 듯한 말이오. 한참 국란이 심한 때인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나쁜 놈이지.》

나는 내친 김에 계속 공세를 들이댔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이불을 쓰고 잔다는 것도 공산당을 모욕하느라고 일본 사람들이 꾸며낸 소리입니다. 우리 유격대에도 여자들이 많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부부간이 될 수는 있구요. 우리는 남녀간의 규율이 엄격합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한 여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교대하는 일이야 없겠지.》

《물론이지요. 우리 공산당처럼 청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간 다음부터 오의성은 나를 김사령이라고 부르면서 시까스르려는 말투를 거두어들였다.

《하하, 김사령이 나를 공산당으로 만들자구 한다.》

《오사령을 공산당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공산당이란 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자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의성은 신경질적으로 팔을 홱 내저었다.

《우린 따로 하면 했지 공산당과 합작은 안하우!》

《그래도 힘이 부족한 때에야 합작해서 일본놈과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글세 난 공산당 신세는 안 진다니까.》

《사람의 전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 신세를 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두 그럴 듯한 말이오. 사람의 전도야 정말 귀신도 알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김사령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쟈쟐리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의성은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지고나서 내 쪽에서 주춤거리는 눈치를 좀 보이자 깨고소해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때 정말 쟈쟐리란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오사령이 나를 골탕먹일 수 있는 만점짜리 문제를 내던진 것이었다.

쟈쟐리란 한집안이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의 《청홍방》이라는 조직이다. 운하를 파고 배를 끌던 노동자들이 생활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황제를 반대하여 내어온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네것 내것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조직이었다.

결의형제를 무으면 형님, 동생 사이가 되지만 쟈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었다. 쟈쟐리에는 아버지 될 사람이 아들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될 사람이 아버지를 얻기 위해 들어갔다.

쟈쟐리는 문벌이 높은 데 들수록 위풍이 있고 권한도 있었다. 쟈쟐리에 들어가자면 식을 해야 했다. 우리의 지시를 받고 제24대 항렬의 쟈쟐리에 들어갔던 김재범(김평)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식이 볼만하다고 하였다. 새로 쟈쟐리에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될 사람과 선배들한테 절만도 몇십 몇백 번 해야 했다.

이런 조직에 나를 들라고 하니 야단이었다. 싫다고 거절하면 모처럼 잘되어가던 담판이 파탄될 것 같고 들겠다고 동의해 나서면 당장 부처님 앞에 끌고가서 절을 시킬 판인데 그것은 오의성한테 코를 꿰어다닐 길을 스스로 닦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담판준비를 할 때 이런 정황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이 자리는 면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사령하고 같이 쟈쟐리에 드는 것은 뜻이 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직에 드는 것은 당조직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조직에서 승인할 때까지는 그만둡시다.》

《하하, 그럼 그 쪽은 절반짜리 사령이지 옹근 사령은 아닌 게로구만.》

오사령은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 기색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였다.

《김사령, 그래 술은 마시는지?》



세기와 더불어

≪마시기는 좀 마시는데 혹 실수하여 반일하는 데 지장이 될까봐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지요.≫

≪당신네 공산당은 괜찮아. 김사령네 하구는 합작하구 싶은데 맑스의 물을 먹을까봐 걱정이거든. 우리 사람들한테 공산당 선전을 하는 건 나빠.≫

≪사령, 그건 염려마시오. 우린 공산당 선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항일선전만 하겠습니다.≫

≪당신네 공산당은 공산당치고는 양반공산당이군! 그런데 왕청공산당이 관영장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건 잘못이야. 김사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뭐고가 있습니까. 그거야 실책 중에서도 제일 엄중한 실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에 왕청별동대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김사령은 참 공정한 군사가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하는 일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른 데가 없다고 하지 않겠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공산주의자들도 사람들인데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나도 이따금 실수를 합니다. 그건 내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라면 잘못을 범할 때도 종종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신수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실책도 적을 게 아닙니까.≫

≪그건 그렇소. 일을 안하는 건달뱅이들한테야 실수라는 것두 있을 수 없지. 공산당이 일을 많이 해. 그건 우리두 인정하는 거구. 어쨌든 김사령하구는 말할 재미가 나거든. 솔직해서 의사소통이 잘된단 말이오.≫

오사령은 이런 말로써 담판을 일단락 지은 다음 내 손을 다정스럽게 잡았다 놓았다. 담판의 성공은 확정적인 것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은 김에 진한장이 김사령의 친구라는데 이 사람이 글솜씨를 가지고 자기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가 없으면 자기는 눈뜬 소경과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하였다.

오의성은 나에게 호진민을 아는가고 물었다. 안다고 하면 우리끼리 서로 내통한다는 것이 알려질 것 같아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사령은 호진민을 호출하여 이 사람이 **김일성**사령이니 서로 알고 지내라고 성의 있게 인사까지 시켰다. 나와 호진민은 생판 모르는 남남처럼 예법대로 초면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한장은 오의성이 이처럼 자기의 막료들을 불러다가 인사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담판은 성사된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우리는 오의성과 함께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의 일상적인 연계를 보장하며 두 군대의 공동행동을 유지하는 데서 조절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반일부대연합판사처라는 상설적인 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고 그 성원 문제까지 토론하였다.

판사처 반일부대측 대표로는 중국사람인 왕윤성을 내세우고 유격대측 대표로는 조동욱을 선발하였으며 사무실은 라자구에 설치하되 오사령의 지휘부 가까이에 두기로 하였다.

이날 오의성은 우리를 위해 푸짐한 점심상을 차렸다.

진한장은 그것도 특대라고 귀띔해주었다.

오찬 중의 담화도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제의 만주강점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오의성은 시커먼 눈썹을 푸들푸들 떨며 비분강개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동산호가 이광을 참살한 데 대해서도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것들은 원래 토배기 비적패거리들인데 우리하구는 갈래가 달라. 그 동산호가 왜놈의 하수인이 되다니. 그놈팽이들이 김사령네 부대를 해친 건 천벌을 받을 일이야. 우리 중화민족 가운데 그런 악마가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오사령의 인금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나는 담판 결과와 오의성의 환대에 만족하였다.

오사령은 틀도 차리고 사상적으로는 국민당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항일 의지와 구국열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이었다. 사상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면서 제한성만 들춰내면 합작을 성사시킬 수 없었다. 공동전선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한성을 무시하게 하였다.

나는 그날로 소왕청에 오사령과의 합작이 잘되어간다는 것과 문제는 채세영인데 그와도 점차적으로 협상해보겠지만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동녕현성과 같은 큰 성시를 칠 필요가 있으니 아무 때나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두라고 연락하였다.

오의성과의 첫 접촉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지체없이 구국군에서 가장 완고한 세력인 채세영 부대를 반일연합전선에 끌어넣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진한장도 오사령은 변덕이 없을 것 같으나 채사령이 문제인데 이청천을 쫓아낼 방도가 없겠는가고 걱정하였다. 오사령의 수하에는 1개 여단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지만 채사령네 부대는 숫적으로 그 보다 더 많았다.

나는 이청천에게 담판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청천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산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채세영을 꼬드겼다. 이청천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채사령도 그 간계만은 반대하였다. 오의성사령이 김대장을 데려다가 오찬까지 하였고 또 김대장이 싸움 잘하는 왕청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잘못 다쳤다가는 큰 변이 난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청천이 어떻게나 반공바람을 세게 불어넣었던지 우리는 채세영 문전에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채사령 부대를 오의성과 떼어놓는 데 있었다. 우리와의 합작에 응해나선 오의성을 채세영으로부터 떼어내는 길은 오사령의 기간부대인 사충항 여단을 우리의 영향하에 두는 데 있었다. 여단장을 잘 설복하면 오의성과의 담판에서 이루어진 초보적 성과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여단의 구성을 알아보니 대체로 하층계급 출신이었다. 사충항 자신도 9살 때부터 지주집에서 돼지몰이를 하다가 먹고살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는 길림육군에서 왕덕림의 부하로 복무하다가 9.18사변 후 구국군이 되어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을 거쳐 한개 여단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전형적인 군인 기질의 소유자였다.

나는 호진민의 소개신을 가지고 그날로 사충항을 만났다.

내가 면회를 요청하자 여단장은 아무런 걸치레도 없이

세기와 더불어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만나주었다. 그는 왜놈을 잘 치는 김대장이 자기네 부대에 온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 사람에게는 반공의식도 없었고 군벌기질도 없었다. 아주 소탈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사충항은 김대장 부대가 일본군대와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자랑이자 동만인민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당시 쟈피거우 전투, 량수천자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통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비록 신문들이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간도 지방에 그 소문이 굉장이 퍼졌다. 놀랍게도 사충항은 그 전투의 전말과 전과를 잘 알고 있었다.

연합하여 동녕현성의 적을 치자는 나의 제의는 사충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측근에 김대장네 유격대와 같은 강력한 우군을 두고 싶었소. 오늘부터 우리는 한 형제요. 김대장의 원쑤이자 나의 원쑤고 김대장의 벗이자 나의 벗이오.≫

여단장과 나는 담판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억세게 포옹하였다. 그후 우리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 피와 살을 나누는 형제가 되고 전우가 되었다. 사충항이 독립2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전사할 때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

라자구 담판의 결과로 하여 항일혁명 앞에 가로놓였던 가장 큰 암초는 제거된 셈이었다. 우 사령과의 합작이 공동전선을 위한 시발점이었다면 오의성과의 담판은 그 시발점에서 얻은 성과를 전 동만의 범위에로 확대시킨 역사적인 진일보였으며 5.30 폭동과 만보산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조중 두 나라 민족의 무의미한 대립과 유혈을 종식시키고 반만항일의 거세찬 흐름을 하나의 대하에로 합류시킨 통쾌한 사변이었다.

오의성, 사충항과의 담판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공동전선도 자기의 주체적인 힘이 강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1932년의 남북만 원정과 왕청을 중심으로 하는 1933년의 대소 전투들에서 자체의 군사적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거나 유격대를 승승장구하는 무적의 철군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더라면 오의성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쫓아버렸을 것이다. 오사령과의 합작이 그처럼 순조롭게 이루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했고 정치도덕적 풍모가 구국군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열렬한 애국심과 국제주의적 우애심,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를 공감시켰기 때문이었다.

나는 구국군과의 합작을 실현한 그때부터 통일전선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주체적 힘이라는 것과 이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우군이나 우방과도 연합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을 일상 동안 벌여왔다.

동녕현성을 치자는 데 대해서는 오의성과 채세영도 찬성하였다. 우리는 라자구에서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을 비롯한 구국군 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열고 이 전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전방침을 세운 다음 왕청본부에 또다시 편지를 써보냈다.

오의성과의 담판과 동녕현성전투의 성공으로 하여 동만의 유격부대들과 구국군 부대들, 반만항일세력들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의성과의 합작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전반적 항일혁명을 추진시키는 데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중심고리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간도를 떠나 장백 일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도 나는 오의성과의 합작을 성사시키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 당시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오의성은 무송지구에 활동거점을 잡고 우리의 익측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공동투쟁의 나날에 맺어진 옛정이 다시 살아올랐다.

나는 100여 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오의성 부대의 밀영이 자리잡고 있는 서강 동쪽 수림으로 찾아갔다.

그때 오의성은 영채 밖에까지 뛰어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10년이나 20년쯤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죽마고우들처럼 뜨겁게 포옹하였다.

초연에 절은 오사령의 거슬거슬한 수염이 볼에 와닿는 순간 나는 어째서인지 목이 꽉 메는 듯한 격정에 휩싸였다. 군벌기질이 다분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 중국 사나이와의 상봉이 왜 그다지도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지 알 수 없었다. 싸움 속에서 맺어진 정이란 참으로 유별난 것이었다. 나는 오사령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나를 친형제와 같이 진심으로 환대해주는 데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탄우 속에서 맺어진 우정, 세상에 이 우정보다 더 진실하고 더 열렬하고 더 공고한 우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전투적 우정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호랑이가죽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매 눈 같이 예리한 눈길로 사람들의 인금을 가늠하던 왕년의 도고하던 기상은 오의성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천 명의 부하들을 쥐락펴락하던 녹림호걸이라기보다는 촌늙은이에 가까운 텁텁한 모습이었다. 살도 빠지고 눈 정기도 약해진 것 같았다.

나는 오의성의 밀영에서 이틀을 묵고 돌아왔다. 내가 떠날 때 오사령은 부하 100명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사양의 뜻을 표시하자 그는 짐짓 노하는 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사령한테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겠소. 그렇지만 큰 싸움을 준비하는 김사령에게 나도 친구로서 무슨 도움을 줘야 할 게 아니오. 그 100명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김사령 수하에 가야 합니다. 속담에 다북쑥도 삼밭에 가면 곧아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 후 나는 오의성을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 해 말에 오사령이 부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쏘련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뒤로는 서로 연계가 끊어져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오의성은 우리가 공동전선의 위업을 개척할 때 잠깐 동안 필요했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어깨겯고 포연탄우를 헤쳐온 잊지 못할 전우였다. 오사령이 후반 생을 어떻게 보냈고 최후를 어떻게 마쳤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해명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어데서도 믿을 만한 소식은 들을 수 없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애족의 이념에 충실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뿐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장군중의 으뜸장군이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7일～18일



정주영씨와 그 가족일행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뵈온직후 응접실에 들어서자 같이 따라온 수행원들이 그의 곁에 와 ≪접견이 잘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접견을 받은 영광과 기쁨에 젖어든 정주영씨는 ≪나는 오늘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었어.≫라고 흥분하여 말하고 엄지손가락을 그들앞에 세워보이며 ≪과시 **김정일**장군님은 장군중의 으뜸장군이시야.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오니 이제는 통일이 다되었어다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외치다시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정주영씨는 희열에 넘쳐 ≪젊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나는 감탄했어. 이남에 대해서도 환히 꿰뚫고 계시고 내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연설을 하였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나라의 통일방안도 명확히 밝혀주셨어. 참으로 배심이 든든하시고 활달하셨어. 협력관계에서 우리 회사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라고 했습니다.

정주영씨의 말을 듣고 난 수행원들은 ≪우리 회장님은 오늘 하느님을 만나셨다.≫라고 하며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고 합니다.

정주영씨의 가족일행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80고령의 정주영씨를 자신께서 계시는 곳으로 오게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밤늦게 자기들의 숙소에까지 찾아오셨을뿐 아니라 자기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주영씨를 가운데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데 대해 무상의 영광으로 간주하며 한밤을 영도자님의 광폭정치에 관해서, 그분의 위인적 풍모에 관한 얘기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정말 이남에서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기에 정주영씨는 수행원들에게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런 분이시니 북의 남녀노소할 것없이 전체 백성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는 것이다. 장군님의 인덕정치에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정주영씨와 그 가족일행을 만나주신 시간은 40분가량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씨와 그 가족일행은 옹근 한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삶의 가치보다 더 아름벅찬 삶의 가치를 받아안았다고 합니다. 정주영씨와 그 가족일행은 담대하시고 낙관에 넘쳐 계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은 인간중의 인간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그분의 위대한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접견을 받은 정주영씨 가족일행의 한사람인 정몽헌씨는 얘기하기를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말씀도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을 끌게 하시며 농담도 뜻이 깊게 하신다고, 영도자님께서 담화를 마치시고 로동당당수와 만났다는 것을 보도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민족화해와 단합, 협력에 방해가 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니 없애야 한다는 것을 뜻한 것이라고, 정주영씨가 창업주로써 배짱이 있고 일단 결심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대와 아태가 합의한 것을 잘 이행하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농담을 하여도 매우 뜻이 깊게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더더욱 감탄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위인적 풍모에 완전히 매혹된 정주영씨는 영도자님께 말씀드린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존경하며 따를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의 존재여부는 그분과 직결됩니다. 오늘 우리 이남민중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니 배달민족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집니다. 우리에게는 주체성이 강한 민족적인 지도자가 계신다고 하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무한히 경모하며 그분의 영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세찬 바람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수 없듯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조국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그분의 치하에서 만복을 구가할 그날은 머지 않아 꼭 올 것입니다.

수지김 남편 살인혐의 기소

14년만에, 직접증거 없어 공방예상

(서울=연합뉴스 2001년 11월 13일) 김성용 기자 = 검찰이 지난 87년 ≪홍콩 여간첩 수지김(본명 김옥분. 당시 34세) 피살사건≫과 관련, 당초 북한측에 의해 납치됐던 것으로 알려진 뒤 홍콩 자택에서 피살체로 발견된 김씨가 남편 윤모(43)씨에 의해 살해됐다고 결론짓고 윤씨를 살인 등 혐의로 전격 구속기소했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윤씨가 부부간 성격차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고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을 거쳐 자진 월북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자신의 폭행치사 혐의만 부분적으로 시인한 채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살인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여서 향후 살인죄 적용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윤씨는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행하던 중 김씨가 실신하자 ≪죽은 것 같아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목을 조르게 됐다≫며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건 당시 부인 김씨가 북한 공작원으로서 남편을 납북하려 했다는 당시 안기부발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원에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평소 부인의 전력이나 성격차,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말다툼을 벌여오던 중 87년 1월3일 0시20분께 부인 김씨의 홍콩 소재 아파트 침실에서둔기로 김씨의 이마를 때려 실신시킨 뒤 현장에 있던 여행용 트렁크 가방을 묶는 캔버스 끈으로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윤씨는 김씨의 사체를 침대 밑에 숨기고 싱가포르로 도주, 북한대사관을 찾아가자진 월북하려다 실패했다는 것.

윤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홍콩에서 조총련계로 보이는 일본인 2명에 의해 납치된 뒤 나도 북한대사관에 납치됐다 겨우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안기부 등 공안당국은 87년 1월9일 귀국한 윤씨를 상대로 3개월 가량 조사를 벌인 뒤 부인 김씨가 북한 공작원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씨를 이용해 남편 윤씨를 납치하려 한 ≪납북 미수극≫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씨 가족들의 고소로 재수사에 착수, 홍콩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4년 10개월여만에, 살인 혐의 공소시효(15년)를 불과 두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윤씨를 법정에 세우게 됐다.

수지김 남편 ≪안기부자술서≫확보

(서울=연합뉴스 2001년 11월 22일) 공병설 기자 = 검찰이 ≪수지 김 피살사건≫과 관련, 김씨의 남편 윤모씨가 87년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안전기획부에서 범행을 자백한 자필 자술서를 확보했다. 이로써 직접 증거없이 윤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고, 안기부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공안사건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윤씨가 87년 안기부 남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4차례에 걸쳐 작성한 자술서 등 당시 조사기록중 일부를 넘겨받았다고 22일 밝혔다.

190여쪽 분량의 자필 자술서에는 윤씨의 어린 시절부터 안기부 조사 직전까지 행적이 담겨 있으며, 범행 자백과 사건 당시 정황, 납북미수 조작 등 범행은폐 경위등도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술서에는 윤씨가 부인과의 불화로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및 범행 동기가 자세히 적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넘겨받은 기록에는 조사자 이름은 없고, 국정원은 윤씨 조사에 참여한 직원 명단과 당시 수사지휘 라인 등 별도의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지김 피살사건이 일어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공소유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안기부 조사기록까지 확보해 훨씬 수월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평소 부인의 전력과 성격차이,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말다툼을 벌여오다 87년 1월3일 새벽 김씨의 홍콩 아파트 침실에서 둔기로 김씨를 때려 실신시킨 뒤 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지김 사건≫ 수사하다 중단

(서울=연합뉴스 2001년 11월 22일) 김종우 기자 = ≪수지 김(본명 김옥분)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3과는 지난해 2월 홍콩 경찰로부터 수지 김 사건의 수사기록 및 정보를 넘겨받아 김씨의 남편 윤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자료를 넘겨준 뒤 내사를 중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인계를 정식 요청해 지난해 2월 사건인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지 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중단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중단 경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및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김 사건, 안기부의 추악한 ≪안보 쇼≫

≪수지 김 사건≫ 날조, 옛 안기부 · 외무부 합작…
≪국정원 역할 조정 계기 삼아야≫

≪수지 김 사건≫은 1987년 1월,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가, 북한이 김옥분씨(당시 34세·일명 수지 김)를 이용해 김씨의 남편인 사업가 윤태식씨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11월13일 서울지검 외사부가, 부인 김씨를 살해한 남편 윤씨의 자작극이었다며 윤씨를 구속함으로써 뒤늦게 진상이 밝혀졌다.

평범한 시민이던 김씨가 간첩으로 왜곡·조작된 이 사건에는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뿐만 아니라 외무부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5공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발생한 1987년 1월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전직 외교 관리는 당시 이장춘 대사(명지대 초빙교수·전 외무부 대사)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외무부 본부에 불려가 시말서를 썼다고 전했다. 이유는 본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대사가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시말서를 썼다는 것은 당시 외무부도 안기부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음을 짐작케 한다.

당시 안기부는 이대사에게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윤씨의 기자회견을 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대사관측이 ≪윤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고 끝까지 버티자 결국 안기부는 윤씨를 태국으로 데리고 가 기자회견을 했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는 왜 수지 김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일까. 5공 말기인 1986년은 전두환 정권의 철권 통치에 금이 가기 시작한 해였다. 인천에서는 ≪5·3 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10월에는 건국대에서 대학생 천여 명이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며 농성을 한 ≪건대 사태≫가 발생해, 날로 5공 정권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을 때였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당시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이 ≪반공은 국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구속되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7년 벽두에 터진 수지 김 사건은 정권측이 볼 때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호재였다. 안기부가 1987년 1월 윤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도 불문에 부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 휩쓸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공 핵심 세력이 수사 라인 장악

당시 수지 김 사건을 다룬 안기부의 계선은 정주년 국장(전 국제협력단 총재)-이학봉 2차장(전 국회의원)-장세동 부장이었다. 이차장과 장부장이 하나회 출신으로 5공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씨는 ≪출장을 갔다가 사후 보고를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명확치 않다. 또 윤씨가 국내에 들어온 뒤부터는 해외파트의 손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11월15일 수지 김 사건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간첩으로 몰린 김옥분씨에 대한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역할 재조정론도 불거지고 있다. 한 전직 외교 관리는 북한과 관련한 사안이 터질 경우 겉으로는 외교통상부가 나서지만 모든 것은 국정원이 통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독주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종섭 기자 kumkang@e-sisa.co.kr
시사저널 제631호

KAL 858기 사건, ≪진실 공방 2라운드≫



≪모순(矛盾)≫, 어떤 방패라도 꿰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이나 칼로도 꿰뚫지 못한다는 방패는 성립할 수 없다는 중국 고사이다.

지금 우리는 또하나의 모순을 목도하고 있다. 87년 KAL 858기 사건을 둘러싸고 ≪완전히 쇼≫라는 주장과 ≪대법원에서도 **김정일**의 범죄를 인정한 사건≫이라는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것이다. 또한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두고 김현희의 어린시절 모습이라는 주장과 김현희가 아니라는 주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4년 전의 사건이 다시 한번 ≪진실 공방≫에 오르게 된 첫 포문은 현준희(48세, 전 감사원 직원)씨가 열었다. 14년간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는 현준희씨는 월간 내외저널 10월호에 ≪김현희 KAL기 사건 조작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1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현씨는 ≪KAL기 사건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폭파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공개 반론은 월간조선 11월호에 ≪연합뉴스 계열 ≪내외저널≫의 난데없는 KAL 858기 폭파사건 조작 의혹 기사≫라는 김성동 기자의 글이었다. 김 기자는 현준희씨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현씨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주변 정황 설명이나 관계자 증언을 실었다. 김 기자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정의 수호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도 **김정일**의 범죄를 인정한 사건≫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공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시 월간 내외저널 12월호에 이 사건의 희생자 가족인 차옥정(66세, 희생자 박명규씨 부인), 김호순(55세, 희생자 신태호씨 부인)씨가 ≪상식은 상식이 통하는 데서 논해야 제격이다≫라는 월간조선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실은 것이다. 차씨와 김씨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고 이것저것 추상적인 얘기로만 기사를 채워놓은 느낌이다≫며 특히 김현희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중학교 때의 사진과 관련한 김 기자의 설명을 자세히 반박했다.

이로써 KAL 858기 사건의 진실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논란은 뒤로하고 독자들은 먼저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될 것이다. 왜 14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KAL 858기 사건이 다시 불거져 치열한 공방까지 벌이고 있을까 하는 점과 현준희씨의 주장에 왜 ≪월간조선 기자≫가 나서서 반론을 폈을까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준희씨가 직접 밝힌 바 있다. 현씨가 이 사건을 이제서야 다시 문제삼는 이유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실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북.일 국교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KAL기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 2001. 11. 16)

그리고 그 직접적 계기로는 올해 3월 동국대 황태연 교수가 ≪남북한 과거사≫ 발언 파문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현 시점에서(6. 25전쟁 등에 대해) 사과요구를 제기하는 정치집단이 있다면 이들의 의도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보수세력과 언론이 발끈하고 나선 것을 지켜본 것이었다고 한다. (내외저널 2001. 10)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월간조선은 2001년 3월호에 김성동 기자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 희생자 가족들, 金正日 체포 요구≫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희생자 유족회≫ 회원들이 올해 2월 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폭발물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내용 등을 다룬 것이다. 즉 KAL 858기 사건의 범인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고 그가 사전 사과없이 답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KAL 858기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은 현준희씨의 문제제기 이전에 KAL기 유가족들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소사건과 월간조선의 대대적 보도가 계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월간조선의 ≪특별한 관심≫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10월호에서 역

시 김성동 월간조선 ≪전속기자≫는 ≪KAL 858 폭파사건 가족들의 기막힌 삶≫이라는 기사를 통해 사건이후 유가족들의 어려운 생활 처지에 대해 세세히 보도하였고 그들을 ≪**김정일** 테러의 희생자들≫이라 명명했다. 역시 기사 말미에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과 이 사건을 연결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월간조선 김성동 기자와 이 사건의 관계는 이 정도만 언급하기로 하고 보다 본질적인 월간조선과 KAL858기 사건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후 김현희를 면담한 ≪유일한 민간인≫은 다름 아닌 월간조선 편집장인 조갑제 기자라는 것이다. 일부 유가족은 그를 가리켜 서슴없이 ≪안기부 앞잡이≫라고 지목했다. 이후 조갑제 기자는 나흘간의 김현희와의 면담을 토대로 ≪김현희의 하느님≫이라는 책자까지 낸 적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간조선과 조갑제 편집장, 그리고 일부 유가족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 밑에 있는≫ 김성동 기자는 KAL858기 사건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깊숙한 관심을 갖고 특히 ≪**김정일** 책임론≫을 강조해 온 것이다.

따라서 현준희씨가 김성동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연합뉴스 계열=관변 잡지≫인 내외저널에 KAL858기 사건의 의혹점과 북한측 책임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제기하자 월간조선이 이에 대한 공개적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양측이 주장하는 상반된 내용을 들여다볼 차례이다. 먼저 양측은 KAL858기 사건의 성격과 명칭부터 달리하고 있다.

월간조선을 통해 김성동 기자와 조갑제 편집장은 (편의상 월간조선) 이 사건을 ≪공중 폭파사건≫으로 규정하고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김현희와 김승일이 저지른 ≪테러사건≫으로 보고 있다. 사법기관과 공안당국의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근거로 김현희의 진술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내외저널을 통해 현준희씨와 차옥정, 김호순씨 측은 (편의상 내외저널) 이 사건을 ≪실종사건≫으로 규정하고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로 보고 있다. 기존의 사법기관, 공안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근거로 유해나 유품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책임론 등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월간조선은 ≪확신≫을, 내외통신은 ≪의혹≫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자.

월간조선은 사건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현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법정의 판결이 바뀌지 않았고, 김현희의 얼굴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현희의 신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내외통신은 지금까지 김현희의 증언 외에 지금까지 어떤 확증도 제시되지 않았고 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너무나 많은 거짓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33가지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현준희씨는 내외통신에서 제기한 12가지의 의문점 외에도 100여가지 이상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준희씨의 12가지 의혹점에 대해 김성동 기자는 6가지 정도의 주요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시 유가족 차옥정, 김호순씨가 재 반박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김현희가 중학교 시절 남북조절위 회담차 방북한 남측 대표단의 일행인 장기영씨에게 꽃을 주는 화동으로 참석했다는 대목이다.



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는 까닭은 김현희가 명백한 북한주민인가 하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남북조절위라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건이라 많은 증거 사진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월간조선과 내외통신은 실제로 모두 당시의 사진들을 게재하고 번호까지 매겨가며 각자의 주장을 펴고 있다. 사진속의 여학생이 진짜 김현희의 중학교때 모습인가를 놓고 진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사진을 두고 ≪이 사진의 ③번 소녀가 金賢姬로, 누가 봐도 한눈에 金賢姬 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진 속 소녀의 귀가 정희선(북측에서 사진속의 여학생이 자신이라고 밝힌 여성)을 닮았는지 김현희를 닮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내외저널측에 따르면 사람의 귀는 평생 그 모양이 잘 바뀌지 않은 ≪얼굴의 지문≫ 같은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오는 29일이면 KAL858기 사건 14주기가 된다. MBC에서도 14주기를 맞아 이 사건과 관련된 방영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공은 월간조선측으로 넘어갔다. 월간지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상 발빠른 결론은 어렵겠지만 공방 2라운드를 거치면서 이 사건이 조만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리라는 것은 섣부른 예측만은 아닐 것이다.

한편 월간조선 김성동 기자는 내외저널 12월호의 차옥정, 김호순씨의 반박글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글이 실린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월간조선) 11월호에 쓴 걸로 다 애기 했다고 본다. 논란이 될 수 없는 것을 논란을 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 기자는 ≪유가족들이야 아직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3

≪김현희 증언말고 다른 증거 내놔라≫

KAL 858 사건 14주기, 유족들이 제기하는 7대 의혹

≪내가 만약 김현희 씨의 변론을 맡았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을 것이다. 김 씨가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김 씨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자료도 없는 황당한 사건에 다름 아니다.≫

23일 서울시 중구 명동 천주교인권회관 3층 기자회견장. 11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희대의 악녀≫ 김현희(일명 마유미)에게 김형태 변호사는 오히려 무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다. 왜? 그것은 ≪반어≫였기 때문이다.

증거를 내놓아라, 김현희의 증언말고

≪그날≫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주일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민주≫에 대한 열망이 국민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을 때, 두려움에 찬 군사정권의 가슴도 바짝 타들어 갔다.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들불처럼 번져 ≪현실≫이 되려는 찰나, 차가운 소나기를 품은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1987년 11월 29일, KAL 858기 벵골만 상공에서 실종≫

115명의 무고한 생명이 한 줌 재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 중동의 뙤약볕에서 굵은 땀을 흘린 뒤, 사랑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던 노동자들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북한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특수요원 ≪김현희(마유미)≫의 계획된 폭탄테러였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또 88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적할만한 ≪믿음직한≫ 군인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수밖에 없었다.



바레인에서 붙잡힌 김현희는 한국으로 압송된 뒤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14년, 마유미는 살아있고, 유족들은 사건조작을 의심한다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현희는 1990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그리고 ≪이젠 여자가 되고 싶다≫는 선언적인 제목의 수필로 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 안기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촉구하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23일 기자회견장에 나온 유족들은 ≪심지어 안기부직원들에게 멱살 잡히고 욕설을 들어가며 일체의 집단행동을 방해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족들은 최근 검찰의 조사로 내막이 드러난 ≪홍콩여간첩 수지김 사건≫을 보면서 더욱 의혹을 떨칠 수 없었다. 수지김 사건이 터진 해 역시 1987년이었다.

게다가 ≪최근 김현희의 진위를 둘러싼 ≪월간조선≫과 ≪내외저널≫의 공방, ≪한겨레≫ 등의 언론보도를 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현희의 진술 말고는 이렇다할 물증이 없고, 의혹제기에 대해 안기부(현 국정원)의 대응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의 진정을 접수한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자료를 통한 확인작업을 거쳐 ≪대한항공 858기에 대한 7대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7대 의혹을 요약하면 이렇다.

▲ 사고기가 앞바퀴 고장으로 비상동체착륙을 하는 등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 ≪수중공명위치탐지기≫를 이용한 블랙박스 수거가 가능한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고 사고 10일만에 현지조사단을 철수시켰다 ▲ 김현희의 진술에 허점이 많은데도 물증수집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김씨의 자백에만 의존했다. 더구나 음독자살 시도 뒤 김씨의 위를 세척했던 의사는 김 씨의 위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음독설을 부인했다. ▲ 김씨는 탈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탈출하지 않고 붙잡혔나 ▲ 당시 안기부가 제시했던 사진 속 인물은 김현희가 아니라는 주장이 각종 사진자료와 취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밝혀진 ≪홍콩여간첩 수지김 사건≫처럼 안기부는 사건의 진실을 알면서도 수사과정에 ≪대통령 선거국면≫이라는 특수한 변수를 고려한 것 아닌가.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재조사촉구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29일 서울 양재동 위령탑 앞에서는 14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시 수사관계자가 양심선언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노순택 기자 nohst@ohmynews.com

대한항공 858기 사건 7대 의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987년 KAL기사건에 대한 다음의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의 재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1.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7년 11월 29일 14시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 방콕공항에 ≪45분 후 방콕에 도착하겠다. 비행 중 이상 없다≫는 보고를 무선으로 보낸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다. 이런 경우 기체의 결함에 의한 추락인지, 실종인지, 폭파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했어야 했다. 실제 KAL858기는 1987년 9월 2일 앞바퀴가 나오지 않아 비상동체착륙을 하는 등 과거에도 두 번씩이나 기체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기 출항은 고장수리 후 첫 출항이었는데 이러한 기체결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1-1 858기를 통해 아부다비 공항에 내린 15명 가운데 김현희 일행을 제외한 11명의 신원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들 중 혹시 국제테러단체와 관련된 인물은 없었는가?

2. 비행기 사고 시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작업은 기본이다.

비행기의 블랙박스는 바닷 속에서 1천도의 온도와 중력의 1백 배를 견디면서 30일 동안 반경 2마일에 계속해서 발신음을 보낸다고 하는데 수색작업 초기에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블랙박스 발신음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중공명위치탐지기≫가 필요한데 당시 우리 나라에 장비가 없었다면 보잉사에 장비를 요청했어야 했다. 장비 없이 블랙박스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인가? 그리고 858기 격추되기 하루 전 인도양의 모리셔스해역에서 추락한 남아공의 점보기는 수심 4천미터에서 항공기의 잔해가 발견됐고, 소련의 미사일에 요격된 KAL007기의 경우도 1년여가 지나도 계속 부유물이 발견됐는데 858기의 경우 사고 발생 단 10일만에 현지조사단을 철수시키고 기체나 탑승객의 유품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2-1. 잔해나 유품 등 증거물이 나타나지 않다가 12월 13일 미얀마 서쪽바다에서 25인승 구명보트가 발견되었다. 구명보트 안에서는 13종 50여 가지의 물품이 나왔으나 이중 공기압축펌프의 파손을 이유로 이를 KAL기 잔해라고 주장하였다. 구명보트가 멀쩡한 상태에서 50종의 물품 중 공기압축펌프만 파손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가? 게다가 발견된 구명보트는 펼쳐지지 않고 말려있는 상태였다.

3. 당시 안기부는 증거확보 및 확인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1988년 1월 15일 안기부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115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참사임에도 비행기 동체를 포함한 잔해 및 승객의 유류품 등의 직접 증거물은 없고 오직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비행기가 폭파되었다고 하였다. 왜 기체나 유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가? 더구나 김현희의 진술과 자백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음에도 당시 수사기관인 안기부는 현장조사를 게을리 하였다. 자백만으로는 증거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왜 물증의 수집이나 증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김현희의 진술 외에 KAL 858기가 폭탄테러에 의한 공중폭발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무엇인가?

3-1 김현희는 평양에서 모스크바와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 빈으로 들어갈 때 빈의 남역에서 내렸다고 자술서에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취재했던 프리랜서 작가 일본인 노다 미네오씨는 김현희가 남역이 아닌 서역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빈의 남역은 공산권에서 오스트리아로 들어갈 때, 그리고 서역은 서방권에서 들어갈 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현희는 후에 자신의 수기에서 노다씨의 주장대로 진술을 뒤집었다.

3-2 김현희가 머물렀다는 호텔 호수도 당초 발표된 603호는 암파크링 호텔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안기부는 김현희의 아버지가 앙골라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수산대표 김원석이라고 발표했으나 당시 앙골라에는 북한 무역대표부가 없었으며 수산대표라는 직책도 없다고 북한은 공식 발표하였다. 유일한 증거가 될 지도 모르는 자백의 최소한의 신빙성조차 당시 안기부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3-3 김현희가 음독 후 최초로 진찰한 바레인 살마나야 병원의 야코비안 응급부장은 마유미에게서 위세척을 해도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음독설을 부인했다는데 안기부는 서울에 도착한 12월 15일까지 음독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있었다고 하였다.

4. 김현희 일행은 왜 탈출하지 않았는가?

아부다비에서 바레인에 도착한 11월 29일 오전 4시 34분부터 12월 1일 로마로 가기 직전 음독할 때까지 이틀이라는 탈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김현희 일행은 탈출하지 않았다. 11월 30일부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호텔로 전화를 거는 등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12월 1일까지 하루동안 계속 호텔에 머물렀다. 이들을 극비지령을 수행하는 공작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4-1 동양인이 드문 당시 동유럽과 오스트리아에서 한가롭게 쇼핑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자취를 남겼고, 바레인에 호텔에는 소지품을 495점이나 남겼다. 폭탄을 놓고 내린 아부다비에서 곧바로 유럽으로 향하지 않고 섬나라 바레인으로 간 점이나, 바레인에 로마 행 비행기가 하루에 4편이나 있는데 한가하게 이를 간 관광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하루 전 858기 폭탄테러범의 모습인가?

5. 사진 속의 소녀는 김현희가 아니었다.

마유미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로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의 어릴적 사진을 몇장 내놓았다. 72년 11월 평양 남북조절위원회 환영행사 때 당시 11살이던 김현희가 남측 장기영 대표에게 꽃을 전달하는 사진이었다. 또 다른 한 장은 일본 공산당잡지에 실린 꽃을 든 김현희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사진 속의 인물로 지목했던 김현희는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정희선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정희선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

5-1 사람의 얼굴에서 귀는 성장해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사진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진 속의 소녀들은 귓불이 도톰하지만 김현희는 귓불이 거의 없는 속칭 칼귀라는 것이었다. 컴퓨터 분석 결과에서도 사진 속의 두 소녀는 정희선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 안기부는 이런 오래된 사진까지 동원하며 김현희를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해야 했는가?

6. 정부는 법으로 제시된 기간까지 어기며 서둘러 사망처리 하였다.

실종자들의 호적이 실종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자 가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괄 사망 처리했다. 법적으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항공사고, 선박사고는 1년 이상)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하는데 서둘러 사망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7. 최근에 발표된 1987년의 ≪홍콩여간첩수지김피살사건≫처럼 안기부가 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진실을 알면서도 수사과정에 당시 대통령선거 국면이라는 특수한 시국의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7-1 수지김 사건도 858기와 같은 해인 1987년에 발생하였다. 살인을 한 윤씨가 범행사실을 안기부 직원에게 알렸음에도 윤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관련 간첩사건으로 둔갑시켰다. 다행히 유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으로 14년이 지난 최근에야 검찰의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1987년은 ≪6월항쟁≫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드높았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더구나 김현희는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실제 대선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2001.11.23

시민사회단체, ≪김현희 KAL기사건 대책위≫ 결성키로

당시 대법관 이회창, 수사국장 정형근



오는 29일 KAL858기 사건 14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26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의 제안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의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87년 KAL 858 진상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대책위원회 구성과 기자회견 일정 등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격려인사를 통해 ≪14년전, 87년 KAL기 사건은 정체가 분명치 않≫다고 규정하고 ≪전민중이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정부가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한다며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14년간 추적해온 현준희(48세, 전 감사원 직원)씨의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현준희씨는 KAL기 사건은 ≪북한이 폭파했다≫는 7자로 요약될 수 있는데 북한이 했다는 주장과 폭파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정보당국의 발표중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는 88올림픽도 300일이나 남아 있었고 거물이나 외국인이 탄 비행기도 아니었다≫면서 ≪그때 북한에서도 올림픽 분산개최를 위해 경기장을 건설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행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에서 한달간 발신음이 나오는데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중공명장치≫가 필요한데 ≪미국의 보잉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장치를 우리정부는 빌리지도 않아 사실상 수색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발언에 나서 피해자 가족은 아랍인 2명을 제외하면 모두 113가족이며 현재는 95가족 정도가 연락이 된다고 말하고 당시 재판에서 대법관 중의 한 명이 이회창 현 한나라당 총재였으며, 안기부 수사국장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책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대책위의 명칭을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로 정하고 14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양재동 시민의 숲에 있는 추모비 앞에서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이 사건 관련 비디오 시청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7일경에 정식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간 피해자 가족 등 일부에서만 제기되던 KAL858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방송(MBC)에서는 지난 두달여간 준비해온 이 사건 관련 방영물을 28-29일경에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6

≪KAL 858은 폭파 아니라 실종≫



≪KAL 858은 폭파된 것이 아니라 실종되었다≫

1989년 KAL 858기 사건이 발생한지 14주기를 맞은 29일 오전 양재동 시민의 숲에 위치한 ≪대한항공기 버마상공 피폭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 주최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은 회견문을 통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혹투성이≫였으며 ≪진실 규명은커녕 의혹만 더해가고 있을 따름≫이라고 지적하고 ≪김현희의 자백만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준)는 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과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할 것, 김현희 스스로 진실을 밝힐 것,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각성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준)는 ≪김현희 KAL기 사건은 폭파가 아니라 실종사건≫이라며 ≪대책위원회를 범국민적으로 결성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실제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옥정(66세, 희생자 박명규씨 부인)씨는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가족일동≫ 명의의 ≪김대중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를 통해 최근 수지김 피살사건을 예로 들며 ≪재수사를 한다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단의 배려와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14년간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의혹을 추적해온 현준희(48세, 전 감사원 직원)씨의 의혹제기 및 해설이 있었다.

현준희씨는 경향신문 88년 1월 15일자 1면에 실린 두 장의 김현희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한 신문에 다른 귀 모양을 한 두 장의 사진을 놓고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면서 이 사건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와 임종일(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정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김정일**의 친필지령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고 발표한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의혹점을 질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낮 12시부터 진행될 14주기 추모식에 참석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가 기자회견에 불만을 품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철승(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의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나쁜 놈들 아닌가? 이걸 파괴해야지. (8. 15때) 평양가서 한 놈들 아니야≫라며 격앙을 감추지 못했고 이희달(호국6. 25전상동지회) 회장은 ≪경찰 와서 (기자회견을) 치라고 해야지≫라며 기자회견 개최를 불법시했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양측의 실랑이는 이어졌고 멱살잡이 상황이 벌어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승헌(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은 ≪대책위는 이 사건의 조작의혹이 깊어 실종자 가족들과 풀어갈려고 했는데 유가족들도 아닌 이철승씨를 비롯한 반공단체에서 나와서 방해하고 폭력까지 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승 대표의장은 ≪왜 여기와서 이렇게 하나, 평양 갔다온 사람들이 **김정일**이 지령을 받고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유가족에) 프락치를 심었다≫고 단언하고 기자회견을 ≪추도식 파괴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건 14주기를 맞아 위령탑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도로 열렸으며 우익인사들과의 충돌을 빚는 등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여 취재진의 관심도 높았다.

대책위(준)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1시 한국노총에서 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어서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9

≪국정원, 반성보다는 오히려 수사권 확대≫

대경연합, 국정원 규탄 시위 나서



87년 KAL기 사건 의혹, 수지 김 사건 조작 등을 비롯해 각종 부정비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테러 방지를 이유로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지역 사회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27일 오후 1시,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이하 대경연합) 회원 10여 명은 국가정보원 대구사무소(수성구 만촌2동 소재) 앞에서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를 가지고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태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대경연합은 ≪최근 국정원과 관련한 온갖 의혹 사건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면서 ≪부정부패 사건에 이어 심지어는 지난 87년 김현희 KAL 폭파사건도 조작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수지 김 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경연합은 ≪그러나 온갖 의혹과 부정비리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보안법 보다 더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구로 치장된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하며 수사권 확대 등 권력을 강화하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경연합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같은 시각 각종 의혹 진상규명과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baebsae@ohmynews.com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하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상정에 임박해 있다. 통상 20일 이상을 두는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법 제정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간 내 법안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변칙을 서슴치 않더니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차관회의-당정협의- 국무회의의 통과를 거쳤다. 이런 상황이면 상임위 또한 무리없이 통과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의 국회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현안들이 당리당략에 놀아나고 있는데 유독 테러방지법만 순항에 돛 단 듯 질주하고 있다.

졸속 추진이 부를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확대한다는 데 있다. 최초법안에 명시되었던 수사권의 경우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는 것에서 보여지듯 실상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한 겹 외피를 뒤집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뿐인가. 테러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다수가 테러로 분류될 소지가 많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별도의 법이 없어도 기존의 수사권으로 충분히 테러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수사권이 너무 방만하고 비대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명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테러방지법의 의도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마구잡이로 유린했던 안기부의 부활을 꿈꾼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한 국정원의 권력 부활 기도에 맞서 인권·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국가 테러 진짜 주범은 국가정보원≫

사회단체 회원들, 국정원앞 테러방지법 항의집회



≪지난 1995년 인권유린 문제로 폐기됐다가 최근 다시 복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 테러법을 내세웠던 지난 10년간 7만 5천 명을 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집회·시위권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던 테러방지법안이 일부 내용만이 수정, 삭제된 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법안을 반대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의 소속 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27일 낮 12시 내곡동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 임기란 상임대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등은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국정원은 국민 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이를 전달했다.

항의서한에서 이들은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지만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아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면서 ≪형식상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결국 국정원의 수사권 강화 부분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보 기관에 머물러야 하며, 기획의도나 효과성에서도 의문인 테러방지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이어 ≪테러방지법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27일 테러방지법 의결

국정원은 지난 12일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 논란이 일자,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1일 공지 없이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된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구속기간 연장과 참고인 구인·유치 조항은 사라졌고, ≪불고지죄≫ 조항은 ≪테러범죄신고 불이행죄≫로 바뀌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정원 관계자와 박종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단축하고, 국정원이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테러방지법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전쟁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안≫을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대 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테러관련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주요 골자다.

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선동한 사람도 2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며,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안은 특히 테러단체의 수괴에 대해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 자금을 조달, 주선,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세탁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 감청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공희정/노순택 기자 khj@ohmynews.com

국정원은 국민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



대테러 업무 장악과 수사권 확대를 노리는 국정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기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하며, 테러대책을 틈타 《음지의 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에 불이 붙었다.

지켜보기조차 숨찬 입법과정을 보자. 국정원은 지난 12일에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만 두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정협의도 마쳤다.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각종 민생법안은 꽉꽉 막혀 있는데, 유독 이 법만은 쾌속질주하고 있다. 국정원이 비상하기 위한 날개가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즉각적인 인권사회단체의 반발과 반격에 부딪쳤다. 국정원의 테러업무 주도권 장악을 본질로 하여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인권침해 조항으로 도배된 법안이 상식적인 사회의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법안을 바꿔치기 했다.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다.

그 증거는 확연하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거센 반발에 접하자 이 부분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법안의 겉을 손질하여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다. 몇몇 언론은 이를 두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아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





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 불법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한 것이 고작이었고,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통해 완전히 부활된 대공수사권이 안기부에게 되돌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망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001년 11월 27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상 68개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투쟁

■ 투쟁보고

① 대시민선전전

11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및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주안역, 동암역, 부평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주안역에서는 인천대학교 반전위원회와 인하대 반전위원회에서 선전전을 벌였으며

동암역에서는 사회당 인천시지부, 사회진보연대,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인천노동자의 힘 회원들이 남광장과 북광장으로 나누어서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출근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나눠주는 유인물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부평역에서는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금속노조 콜트지회 회원들이 진행을 하였으며 지나가던 아저씨께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물어 보셨고,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런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아침부터 고생한다≫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라 시민들 발걸음이 바빴지만, 나중에라도 읽어보려는지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접어 넣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② 기자회견 보고

11월 28일 오전 11시에 인천 시청 기자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김영규 공동대표와 이재병 사무간사, 사회당 백인성 인천시지부장, 인천 노동자의 힘 안미정 중앙위원,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김영택 회원, 인천금속노조 콜트지회 방종운 지회장, 사회진보연대 고광완 집행위원, 인천대학교 이제학 제19대 공대학생회장,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류한경 사무국장,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 이은주 사무국장, 다함께 인천대지부 박설, 다함께 인하대지부 조은영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류한경 사무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김영규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앞둔 이 때 남북화해와 통일을 역행하고 이 땅 민주주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정부·여당의 발표에 대해서 이는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인권침해와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것이 뻔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11월28일(수)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으로 민주당 박상규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투쟁알림

① 1인 시위

- 일시: 11월29일(목)~12월8일(토)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낮 12시~1시
- 장소: 부평 민주당의원 사무실 앞
- 11월29일(목)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30일(금)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김영규 공동대표, 12월3일(월) 부평미군기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문병호 집행위원장, 12월4일(화) 사회당 인천시지부
, 12월5일(수) 인천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장 방종운, 12월6일(목) 인천노동자의 힘 안미정 중앙위원, 12월7일(금) 인천여성노동자회 조성혜 회장, 12월8일(토)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② 국가보안법 폐지 및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를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

- 일시: 12월1일(토) 낮 12시
- 장소: 부평역 택시승강장 앞
- 순서 : 민중의례/대회사(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김영규 공동대표)/정치연설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범민련 경기인천연합)/정치연설2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인천대학교 공대학생회)/실천마당(지하철 선전전)
- 집회 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 개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의 날 (부제: 민주주의 치욕 53년 국가보안법규탄대회)≫ 에 참가합니다.(영등포역에서 오후2시)

③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철야농성 결합(12월6일)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류한경 사무국장(오전8시~9시), 인천대학교 반전위원회(오전9시~12시), 인하대 반전위원회(12시~오후3시), 인천 노동자의 힘(오후3시~4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김영규 공동대표(오후4시~5시),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오후5시~6시), 사회당 인천시지부(오후6시~7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오후7시~8시)

■ 문의: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032)428-2230 / 류한경 019-805-2830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27일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 28일 현재 68개 인권·사회단체 가입)의 활동도 다각화되고 있어, 향후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오전 10시부터 공동투쟁 소속 남녀활동가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며,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된 결의를 밝혔다. 1인시위는 테러방지법이 저지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투쟁은 또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상임활동가의 대표서명으로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보기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공동투쟁의 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제출된 청원서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명케 하는 작업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몇몇 의원들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부겸, 김홍신, 최병렬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내왔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화로 확인했다. 지난 26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찬성하거나 묵인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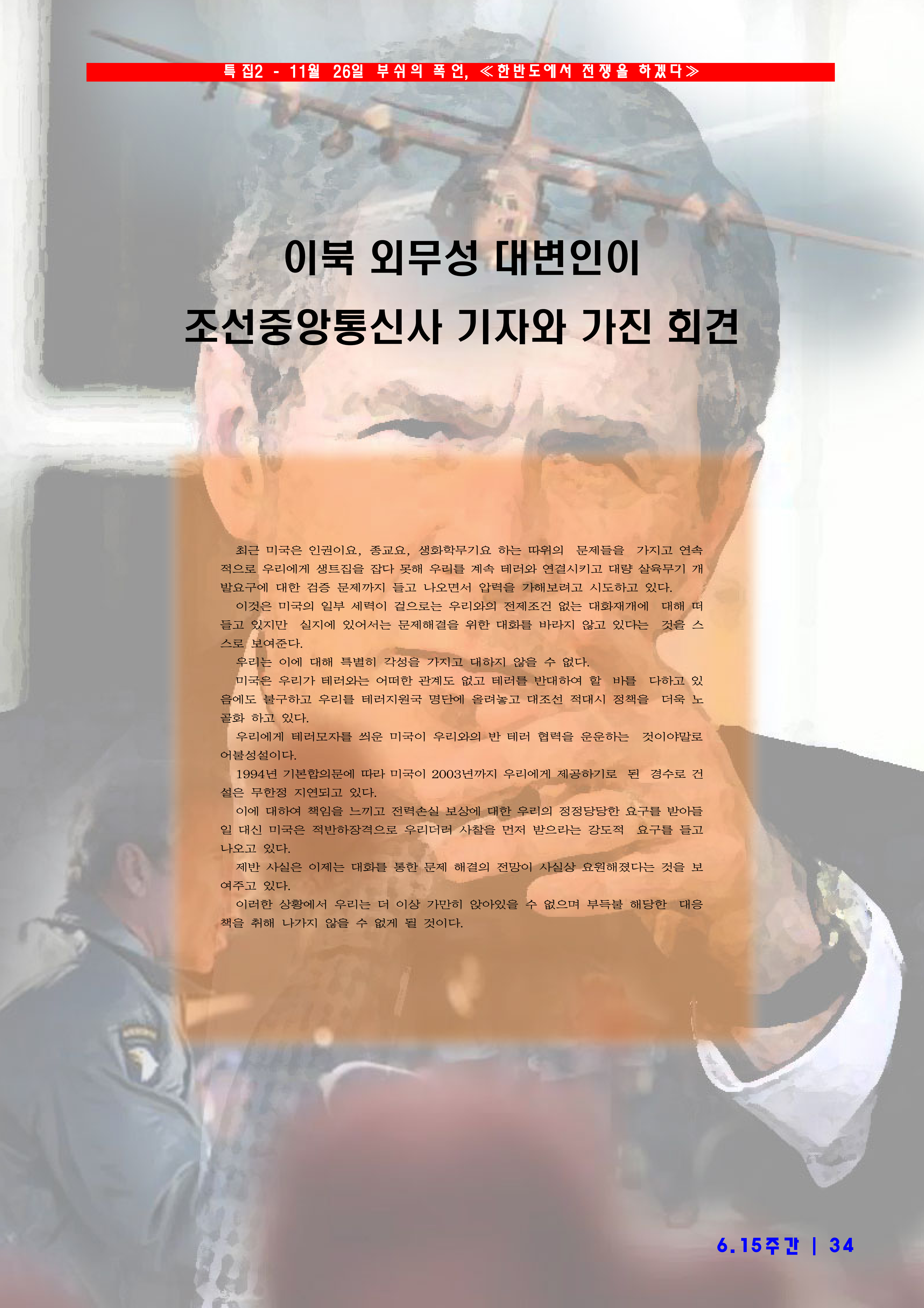
한편, 오는 29일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정원 전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저지활동을 개시하기로 해, 그동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져온 법안저지활동의 범위가 넓혀지게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정원 전북지청을 항의방문하고, 이후에는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비록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지역단체들의 입장을 모으려 한다≫며 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공동투쟁의 ≪청원서≫와 함께 29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 자리에서 소위, 상임위, 본회의 일정이 확정된다.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상임위, 본회의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면 된다.

범용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11월 29일





이북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가진 회견

최근 미국은 인권이요, 종교요, 생화학무기요 하는 따위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생트집을 잡다 못해 우리를 계속 테러와 연결시키고 대량 살육무기 개발요구에 대한 검증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압력을 가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일부 세력이 겉으로는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에 대해 특별히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우리가 테러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고 테러를 반대하여 할 바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

우리에게 테러모자를 씌운 미국이 우리와의 반 테러 협력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1994년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2003년까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된 경수로 건설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전력손실 보상에 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대신 미국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더러 사찰을 먼저 받으라는 강도적 요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전망이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으며 부득불 해당한 대응책을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0~22일

최근 미국의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은 날이 갈수록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남과 북사이에 흐르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또다시 냉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갈수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감행돼 온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얼마전에 미국에서 있은 테러공격을 구실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최근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해 김현규씨 말씀드리죠.

청년학생 여러분, 6.15공동선언발표로 평화와 안정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던 이땅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 구름이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무분별한 전쟁책동은 지금 점점 그 도수를 높이면서 새 전쟁도발의 위험계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전력증강책동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그 무슨 초청강연이라는데 나타나 이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전투력은 테러전쟁전보다 보강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의 위협에 대한 ≪빈틈없는 관찰≫이니 그 누구의 ≪오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니 뭐니하면서 북에 대한 무력압살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역이 비상경계상태에 있는 이땅에 본토에서 끌어온 공군전투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오산, 군산, 수원 등 이미 이땅에 배치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주요장비들에 대해서는 성능개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동해에는 새로운 항공모함,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비하려하고 있고 앞으로 4개의 신속타격전투여단까지 전개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무슨 테러전대비라는 미명하에 발광적인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리는 건 한반도정세를 격화시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을 말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며 나아가서는 북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엄중한 전쟁책동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올해 들어와서도 이땅의 군부호전세력과 함께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연속 벌여왔습니다.

한반도위기상황시 미국본토를 비롯한 태평양지역 미군의 효율적인 전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전시증원연습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 일본주둔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광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가상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한 주일간이나 진행된 이 연습은 사실상 전면 북침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였습니다. 뒤이어 미제2사단의 대규모기동훈련 그리고 미7공군과 군부당국의 연합특공훈련이 진행되었으며 부산앞바다에서는 미해군의 1만3천톤급 기뢰전지휘함 ≪인천호≫와 한국해군의 기뢰부설함, 소해정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기뢰전훈련이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이땅을 작전무대로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정세는 참으로 험악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뒤덮이고 긴장상태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호전세력의 이런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짓부수지 않는다면 이땅에 제2의 6.25가 발발할 것이고 우리 민중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해도 소름끼치는 6.25의 참화, 아니 새 전쟁의 피해는 그보다 몇십배 가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땅은 영원히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새 세기의 주인들인 우리 청년학생들은 겨레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걱정할줄 알아야 하며 그 불행의 화근을 척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중의 온갖 불행의 화근입니다.

이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려면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백만청년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반미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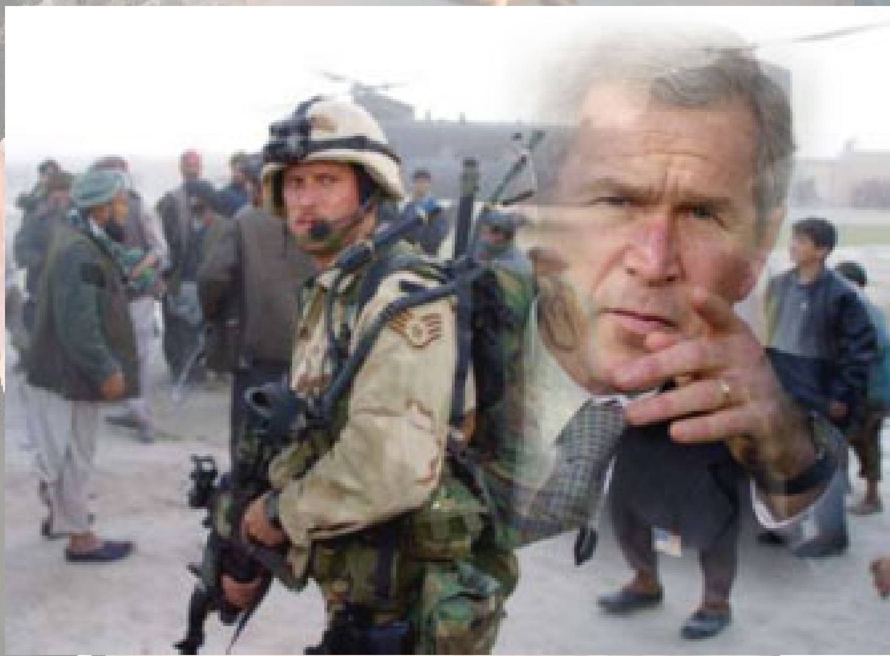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의 선봉에서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평화로운 새 세기, 통일조국의 주인으로써의 자기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옳습니다.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는 건 이땅의 주인인 우리 청년학생들 앞에 나서는 시대적 요구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음 전쟁목표는 ≪한반도(?)≫

부시, 대북 ≪사찰≫발언…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위험하다≫며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사찰을 받지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3년 핵사찰과 98년 미사일 문제로 북미간 ≪총성없는 전쟁≫이 진행되던 시점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93년 이후 10여년 동안 지리하게 계속되던 북미간의 대결양상은 지난해 ≪조미커뮤니케≫ 선언으로 ≪평화협정≫과 관계개선으로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의 취임 이후 이러한 북미간 화해와 평화 국면이 ≪교착≫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김승국씨는 디지털 말(www.digitalmal.com)에 기고한 기사를 통해 ≪미국이 아프칸 전쟁의 승세를 몰아 전쟁을 확대하려고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차적으로 알 카이다 조직을 지원한 국가들(소말리아·예멘·수단)을 족치고 이라크와의 관련증거를 보충한 다음 이라크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 내년 2월로 상정되는 이라크 공격이 성공하면 테러 지원국가 북한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고 내다 봤다.

또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는 ≪미국은 흔들리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다≫며 ≪불량국가≫로 지목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억제라는 명분을 갖고 ≪테러- 반테러≫ 전선으로 패권전략을 짜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씨는 ≪북미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클린턴시절 북미간 고위급 대화채널이 가동됐던 것이 지금은 끊겨져 있어 공식적인 ≪언론매체≫를 통한 설전이 오고가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북미관계를 진단했다.

부시의 발언을 둘러싼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각한 상황은 곧 북미관계의 난관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뜻한다. 이에 대해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씨는 미국측의 적지않은 인적·물적 손실, 중국·러시아 강대국의 견제 등으로 실제 전쟁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호전적인 부시 행정부의 성격,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PAC-3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함 등 MD 체계가 부분적으로 배치, 한미-미일 동맹의 강화등이 1-2년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라면서 ≪지금부터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오마이뉴스(www.ohmynews.co.kr)를 통해 주장했다.

9·11테러 이후 줄기차게 ≪반전 평화≫ 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이러한 대북 메세지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태세다. 전국연합은 오늘(27일) 곧바로 ≪전 세계평화와 한반도 운명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확전움직임은 군사적 패권을 쥐기 위한 수단이며,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위한 공갈협박행위이다≫면서 ≪한반도를 겨냥한 어떠한 전쟁책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보복공격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반전평화운동이 미국의 ≪확전≫움직임과 대북 ≪대량살상무기 사찰≫ 요구로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반전평화운동≫은 전국 55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종태 기자 2001년 11월 27일

전국연합 성명서

미국은 전 세계평화와 한반도 운명을 결코 좌지우지 할 수 없다

1. 미국 부시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생물무기 개발국으로 북한을 공개 지목한데 이어, 어제(26일)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확산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그리고 ≪대량파괴무기 개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2. 이는 보복전쟁의 정당성을 잃고 전 세계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다시 전쟁을 확대시켜 군사적 패권을 쥐기 위한 수단이며, 긴장을 고조시켜 전 세계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위한 공갈협박행위이다.

3.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모두 위반한 채, 아프간 침공을 자행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상하고, 이제 그 침략의 총칼을 다른 나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이라크로 전쟁을 확대하는데 있어 이라크의 테러 관련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콘돌라 라이사 미 안보보좌관의 공개 발언은 전쟁확대가 이라크, 리비아 등을 미국의 침략 정책에 맞게 굴복, 재편하려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 가공할 사건은 미국이 북녘의 이른바 ≪핵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핵 사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다.

4. 자기들의 침략적 욕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짓밟으려는 미국의 작태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군사적 패권을 위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야만적 행동은 결국 세계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침략 전쟁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반도를 겨냥한 그 어떤 전쟁 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확인한다.

2001년 11월 2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서

미국은 새로운 희생양으로 전쟁을 계속 확대하려는 일체의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부시 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기자회견 과정에서 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검증과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부시와 함께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신봉하는 것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획득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군사패권정책을 위해 ≪가상의 적≫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주장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후 소위 반테러 전쟁의 대상을 확대시키려는 꾸준한 시도 속에서 제기된 입장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90년대를 관통해 오면서 미국이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두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다가 이에 대한 합의를 가까스로 이룬 것이 작년의 일인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보다 존재 자체도 입증되지 않은 생화학 무기 사찰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북을 제압해 보겠다고 나선다면 북미관계는 또다시 긴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들이밀며 대화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외교적 대화≫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대화≫가 아니라 ≪항복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의 패권강화를 위해 한나라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 넣은 것도 모자라 이를 계속 확대하며 세계 관계를 근원에서부터 파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촉구≫, ≪미국의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이 노골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보지 않고 따르고 본다는 식의 추종은 나라를 망치는 근원이다. 진정으로 북미대화와 평화정착을 원한다면 미국의 극단적인 패권정책, 흑백논리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세기동안 치떨리는 분단의 고통속에서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로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을 어렵게 열어 놓았다.

강압과 억지로 북미관계를 대결과 긴장으로 몰아가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는 미국의 행태는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움직임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자주, 평화, 대단결 선언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높이 들고 공조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1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청 성명서

우리 민족은 왜 미국을 저주하는가?

9.11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은 전쟁귀신이 들린 듯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놀음을 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범이라는 물증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한 국가를 무참히 파괴하고 학살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그것은 엄격히 말해 미국의 내정간섭이요, 아프간 민중에 대한 대학살극이다.

물론 미국은 그 동안 비축해 두었던 재고 무기를 처분하고 새로운 신무기를 실험할 목적으로, 또한 자국의 군수산업을 일으킨다는 실리에서 일으킨 전쟁이였지만, 실리를 위해 아프간을 짓밟을 권리가 미국에겐 없다.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깡패짓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미국의 작태에 우리 민중들은 곧바로 전쟁반대와 정부의 전쟁지원반대의 입장을 곧바로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등 55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보복전쟁반대와 대한민국정부의 파병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전쟁지원도 반대한다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11월 7일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김동신 국방부 장관, 토마스 하버드 주한 미국대사, 토마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모인 한미 외교,국방 4자 회담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은 대테러 전쟁지원방안을 설명하였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정책에 순응하여 알아서 기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 놀음 야욕은 이제 아프간을 넘어 이라크, 북한에게로 까지 전쟁포고 수준의 위협을 하고 있다.

11월 19일 미국의 부시는 ≪생물무기개발국으로 북한을 공개지목≫했으며, 26일에는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확산을 중단하라는 경고와 함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밟으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은 미국의 대아프간 침략이 단순히 테러의 근절이 아니라 자신의 패권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본성에 근거한다.

지난 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보여진 김대중 정부의 태도는 부시정권의 한반도 긴장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제국주의와 반통일 수구세력에 의해 냉전적 분위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청년들은 단호하게 막아 나설 것이다.

1.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을 넘어 이라크,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구나 6.15 공동선언 이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가는 한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긴장과 냉전의 분위기로 되돌리려는 제국주의적 음모를 규탄한다.

1.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미국의 전쟁 정책에 순응하여 이루어지는 김대중 정부의 파병 및 전쟁지원 방침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의 아까운 혈세를 실업극복 및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1.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위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1년 11월 29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통일부장관을 파면하라

- 남북고위급회담의 결렬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 (대변인 보도 15호)

최근 열린 6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처음으로 아무 성과도 없이 결렬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결렬시킨 최대장애물은 바로 ≪비상경계조치≫이다. 그리고 회담을 결렬시킨 직접적인 장본인은 홍순영통일부장관이다.

≪비상경계조치≫로 인하여 예정된 이산가족상봉과 태권도방문단교환사업이 무산되었다. 끝내는 남북고위급회담마저 결렬되고 말았다. 현정권이 ≪비상경계조치≫는 대테러용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조치야말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으로서 정확히 이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경계조치≫의 발원지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비상경계조치≫와 같은 긴장고조책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을 조종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긴장격화책동으로 인하여 조국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달만 해도 140여차례의 대북공중정탐행위가 자행되었다. 10월 24부터 27일에는 백아도, 원주, 여주 일대 상에 600여대의 전투폭격기가 날아들며 전쟁연습까지 벌여놓았다. 전쟁전야에서만 볼 수 있는 살벌한 군사훈련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력공백을 메꿔야 한다면 항공대대를 비롯 주한미군병력이 증강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화약내나는 전쟁분위기 속에서 이산가족상봉과 태권도방문단사업이 실현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고위급회담이 마련된 것은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한 이북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남대표단은 합의초안도 없이 참가하며 시종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홍순영수석대표는 비상경계조치에 대해서도 대테러용이니 뭐니 하며 옹색한 변명만 되풀이 하였다. 심지어 이 작자는 회담직전 ≪이북에 대한 주적개념은 불가피하다≫는 망언까지 줴쳐대었다.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악한 반통일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 작자는 회담 내내 ≪돌아가면 문초를 받을 수 있다≫느니, ≪공동보도문을 합의하지 않고 돌아가도 좋다≫느니 하며 황당한 소리들만 늘어놓았다. 결국 이 작자는 실무진이 어렵게 합의한 안마저 뒤집어버리는 망동을 부리고 말았다. 이런 자가 놔두고서는 남북관계발전도 이산가족상봉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한편 이회창과 그 패당은 당장 경질시켜야 할 작자를 ≪자존심을 지켰다≫며 오히려 고무하고 있다. 고위급회담을 결렬시키고 이산가족상봉을 무산시킨 작자를 추켜세우고 있는 것이다. 천하의 반민족역적들만이 취할 수 있는 악질적인 반통일책동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긴장격화책동과 반통일분자들의 반통일책동이 갈수록 그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현정권의 친미굴종정책이 더해져 남북관계는 사실상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당면해서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입장이자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이다. 그리고 홍순영은 ≪비상경계조치≫를 옹호하고 ≪주적≫ 운운하며 고위급회담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다. 현정권이 조금이라도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홍순영을 파면시켜야 한다.

부시정권은 하루빨리 대북적대정책, 긴장격화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가로막고 내정에 간섭하는 부시정권에게 반드시 범국민반미항전의 불벼락을 안기고 말 것이다.

현정권은 자주적인 입장에 서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현정권은 지금처럼 홍순영같은 자를 남북대화에 내세운다면 결국 반통일정권으로 낙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11월 16일
서울

범민련 남측본부, 6.15공동선언 실천결의

≪범민련 결성 11돌 기념식 및 합법화 선언대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결성 11주년을 맞아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재 다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5일 오후 경희대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1돌 기념식 및 합법화 선언대회≫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범민련의 이적규정을 철회시키고 6.15공동선언의 실현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결의했다.

대회사를 통해 이종린 의장은 ≪반세기 동안 갈라져 살던 남, 북, 해외가 통일을 향해 스스로 힘을 모아 결성한 대단결의 모체인 범민련은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조국의 통일을 향한 투쟁의 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축사를 통해 ≪모진 탄압과 고난 속에 범민련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하고 ≪7.4 공동성명에 이어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민족통일대전선인 범민련이 대중조직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믿는다≫며 축하했다.

이어 최승환(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의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화해와 협력, 통일을 확신하는 선언이나 부시의 강경대북정책과 정부의 공안탄압, 반통일세력의 음모로 실천이 순탄하지 않다≫며 그러나 ≪2001 민족통일대축전을 추진하며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등 각계 각층이 모여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것을 보며 통일에 대한 확신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환 의장은 ≪범민련, 한총련이 이적단체에서 벗어나 합법화를 쟁취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을 빛내는 투쟁≫이라며 ≪한총련은 선배님들에 이어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01 대축전 평양행사와 관련해 구속됐다 폐암선고를 받고 가석방 된 문재룡 범민련 부의장은 ≪7.4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는 역사적으로 ≪필연적 과정≫이고 6.15 공동선언은 ≪필연적 승리≫≫라고 규정하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생활을 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문재룡 부의장은 ≪동지들과 함께 해야할 내가 폐암 선고를 받아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조국통일 투쟁전선에서 씩씩하게 생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민중노래단 ≪우리나라≫, ≪희망새≫ 등의 공연은 대회 참석자 천여명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으며, 범민련 후원회에서 마련한 동요 중심의 하프연주는 ≪듣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한다≫는 반응을 얻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경남유족회≫ 10여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1돌을 맞으며

90년 11월 20일 저 이역만리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3자가 모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을 합의한 지 11돌이 되었다. 범민련 결성 11돌을 맞으며 우리는 나라의 자주, 통일을 위해 싸워 왔던 선열들과 7천만 겨레 앞에 다함없는 동지애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기간 범민련은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 왔다.

90년대 중반 미 제국주의의 십자포화속에서 ≪고난의 행군≫길을 걸었던 이북 민중에게 진심어린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38선 북녘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고통과 시련, 눈물과 영광으로 점철된 행군길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역만리 머나먼 외지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민족의 하나됨을 기원하고 함께 싸워 왔던 500만 해외 동포에게 뜨거운 동포애를 전한다. 우리는 비록 그대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 핏줄로 이어진 하나의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해 싸워왔던 범민련 성원들과 남녘의 4천만 민중에게 가슴 뜨거운 동지애를 전한다.

조국통일운동 도상에서 나타난 사상적 혼란을 딛고 한결같은 신념으로 범민련을 지켜왔던 노선배들,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비며 조국의 통일을 애타게 외쳐 불렀던 청년학생들, 구속과 연행을 마다하지 않고 범민족대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 들었던 노동자, 농민들. 진정 그대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범민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칠순. 팔순 노선배들이 해를 가리지 않고 걸었던 차가운 감방의 나날, 군용 헬리콥터의 굉음이 온몸을 후벼 파던 10박11일의 연세대, 하얗게 밤을 세우며 타고 넘었던 관악산의 산행길, 생의 마지막 순간을 범민련과 함께 했던 열사들, 범민련이 걸어온 걸음걸음마다에 아로새겨진 고난과 승리의 역사를 7천만 민족앞에 긍지높이 총화한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밑자락에 범민련이 걸어 왔던 투쟁의 역사 또한 배어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범민련 결성 11돌을 맞이하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운동을 로운 높이에서 전개할 각오와 신념에 넘쳐 있다.

2000년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 선언이며 통일조국의 이정표이다. 6.15 선언을 계기로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궤선을 따라 새로운 높이에서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내외에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6·15 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담보하는 근본 열쇠이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이 길에 민족의 자주와 평화가 있으며 융성번영할 통일조국의 미래가 있다. 6·15 공동선언을 온전히 이행하는 이 길이야말로 고통받는 서민의 아픔을 덜어내는 첩경이며 21세기 강성한 통일조국의 미래이다.

6.15 공동선언은 이행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인 정치인들간의 약속이 아니라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전 세계 앞에 공포한 7천만 민족 모두의 심장에 약속한 맹약이다. 이 땅에 태어나 이 강토 위에 태를 묻을 사람이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이 길에서 물러날 자리도 후퇴할 권리도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이 길에서 우리의 신념과 열정,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다 바쳐 싸울 것을 결의한다.

또한 우리는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의 6·15 선언 역행 음모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 든 지금,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 나설 것을 7천만 민족 앞에 간절히 호소한다.

둘째.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범민련 남측본부의 각급 조직 체계를 정비, 보강하며 범민련 지지대오를 확대, 강화하고 민족대단결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노력할 것이다.

범민련은 7천만 민족 대단결의 모체이다. 7천만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근본 담보이며 조국통일 그 자체이다.

7천만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단결이며 민족대단결 강령에 기초한 조직적 단합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대단결을 통해 조국을 통일할 모체답게 7천만 민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참다운 대중조직,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운동을 선도하는 권위있는 운동 조직으로 자신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확고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분열 책동이 엄중할수록 조국통일의 미래가 가까워 왔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끌어 모아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11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화협,
≪북한 어린이와 임산모 돕기 바자회≫ 열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3일 오전 11시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모 돕기 바자회≫ 개막식을 가졌다.

이 행사의 주관을 맡고 있는 민화협 여성위원회의 이김현숙 여성위원장은 ≪생명을 중심가치로 여기고 평화를 열망하는 여성들의 힘을 모아 심각한 영양결핍상태에 빠진 북한 어린이와 임산모에게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건강한 통일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행사는 농수산물, 의류관, 먹거리, 민화협 직영 부스 등으로 나뉘어져 열린다.

주요 행사는 8도 김장김치, 젓갈 대축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국 인삼. 한약재 전시판매전, 북한 상품 특별전 등이 마련돼 있고 또한 100여점의 남북 어린이 그림전시와 청소년들의 민족화해 및 통일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가 행사장 주변에 마련돼 있어 풍성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적지 않다.

특히 개막 첫날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나눔행사를 갖고 행사장에서 참여단체, 민화협 회원과 여성단체 및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0kg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종교계 여성계, 연예. 언론인 30여명의 각계 저명인사의 애. 소장품 전시와 판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민화협은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 의류 및 신발, 임산모 관련 물품, 영아원에 지원할 실량으로 바꿔 12월 중. 하순경에 북측 조선민주여성동맹과 북측 민화협 여성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YMCA, 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중앙협의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의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바자회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모 돕기 행사≫와 농산물값 하락으로 낙심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가 함께 이뤄져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4

57개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남북관계 관련법 개정 중단 촉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강당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화해시대에 역행하는 법률 개정작업의 중단과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 중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금 사용의 경우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에 해당할 때는 사업시행 60일 전까지 국회의 동의(한나라당 개정안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교류사업에 대해 매건 심의.의결(자민련 개정안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 인사 포함(자민련 개정안 중)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한국노총 권원표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은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두 당은 법률안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남북관계 관련법들을 남북화해라는 새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당, 대북지원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북관계 관련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 6명은 이날 오전 8시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최연희(제1조정위원장)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대표들은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중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 예정됐던 자민련 방문은 자민련 측의 사정으로 연기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한 자민련 측의 입장이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약 두 야당이 이번 회기내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 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사회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당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8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내용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1일

화제의 초점 오늘도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워싱턴에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눴으면해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먼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토의된 문제부터 간단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주둔비용증감, 주한미군사용토지의 현안 등 여러 가지 현안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측은 내년에도 10.4%에 해당하는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되어있고 2003년과 2004년에도 이를 기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가운데 4천만평을 2005년에서 20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환한다는데 합의를 보았지만 미군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억평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너무나도 작은 면적이라고 봐요. 특히 미국측은 꼭 돌려주어야 할 서울의 용산미군기지,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은 이번 토지반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용산기지만해도 서울시청이전예정지로 잡은 곳인데 미국측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한국측이 양보했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두고 미국에 끌려다닌 것밖에 없다고 평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보면 이번 회담도 역시 굴욕적인 것으로 됐다고 보이죠.
사회자 : 내년도 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비를 올해보다 10%이상 인상키로 한 것은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한 사대매국적인 행위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미군유지비는 우리 민중의 피땀을 짜내는 악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미군유지비를 통해서도 그걸 잘알수 있는데요. 미국은 당국에 강요해서 미군유지의 이름으로 해마다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있어요. 90년대 중엽부터 3억달러선을 넘어선 미군유지비는 그후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97년에는 3억2,300만달러였고 올해에는 무려 4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은 내년도 미군유지비를 올해보다 10%이상 인상하라고 요구를 해서 당국이 이를 승인을 했어요. 미국은 기지사용료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해마다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로 차지하고 있는 근 1억평의 땅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19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그래요. 또 미제침략군이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이용금은 연간 1,100만달러,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3,800만달러에 달하죠. 95년부터 97년까지의 사이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미군유지비를 위한 간접비로 얻어낸 이득만도 무려 27억6,200만달러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미국에 잘보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주한미군유지에 돌리고 있으니 이런 친미사대매국집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국은 주한미군유지비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할 게 아니라 파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는데 돌려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결국 미국은 해마다 수십억달러를 주한미군유지비의 이름으로 빼앗아가는 셈인데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미국은 이렇게 걷어들인 유지비를 주한미군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며 공격기지의 시설을 보강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긴장격화, 새전쟁도발책동에 돌리고 있어요. 미국은 또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준비를 추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8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미연합방위분담사업이라는 구실로 공군공격훈련장건설 등 100여개의 군사대상강화에 10억2,500만달러를 탕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죠.
사회자 :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기지를 새배치하기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한 합의를 발표한 것을 보면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좀더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윤정원 : 발표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핵심은 2011년까지 미군기지와 훈련장 4,044만평이 반환되고 75만평이 새로 공여되는데요. 공여대상지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반환키로 한 지역은 현재 미군에 공여된 토지에 54.3%에 이른다고 하지만 대부분 미군이 방치해왔던 곳으로 알려져있어요. 더욱이 문제로 되는 건 시민단체 등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번 합의에 반영되지 않은거죠. 서울시내 78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기지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 매향리사격장, **사격장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기지나 훈련장이 반환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의정부, 오산, 평택, 포항인근의 땅 75만평을 구입해 새로 공여키로 한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기지이전과 반환문제를 놓고 강력한 반미투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이런 협의회를 골백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자 : 침략자, 약탈자로써의 미국의 전횡과 우리 민중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저들의 침략기도를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강도적 야망을 우리 겨레는 더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각계 민중은 이땅의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오늘의 모든 고통과 불행, 재난을 면할수 없고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높이 치켜 올려야 합니다. 미군만 나가면 막대한 방위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고 기지문제도 논의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미군철수문제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죠. 각계민중은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도처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는 우리 민중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불평등한 내용들을 모두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국은 해마다 막대한 미군유지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일치한 요구대로 이땅에서 즉시 철수해야한다는 걸 다시금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이 차지한 땅값 얼마나 되나

남의 집 담장안에 들어와 주인에게 마당세를 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날강도이고 무례한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주한미군이 차지한 땅값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일씨 자리함께 해주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내땅 돌려주고 강점자는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미군기지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6일 인천참여자치연대 등 인천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기지되찾기운동 발대식을 갖은데 이어 28일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갔죠. 그런가하면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는 미군기지이전이 아닌 완전한 반환을 주장하며 부평미군기지앞에서 오늘 현재까지 근 1년반동안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한미군이 차지한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관해 얘기를 좀 나눌까하는데요.
오 일 : 미군의 한국강점으로인해 우리 민중은 50여년동안이나 헤아릴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지금 이땅에는 200여개의 미군사기지가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하늘과 땅, 바다의 전체가 미국의 군사기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땅이면서도 내땅이 아닌 강점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면적은 무려 1억평에 달하는데요.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그 1억평의 땅을 돈으로 계산하면 19억 5천만달러에 달합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제땅에 살면서도 땅값을 해마다 바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지난 50여년동안 부지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을뿐 아니라 도리어 미군의 주둔비용과 각종 보조금의 명목으로 해마다 우리 민중들로부터 70여억달러를 받아내고 있잖아요.
오 일 : 미국은 우리 민중의 주한미군철수와 군사기지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력을 증강하면서 군사기지를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해마다 주한미군유지비명목으로 우리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있죠. 1990년대중엽부터 3억달러선을 넘어선 주한미군유지비는 그 후 급격히 늘어나 1997년에는 3억6천만달러에 이르렀고 올해에는 무려 4억4천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은 내년도에는 주한미군유지비를 5억8천만달러로 올리려하고 있죠. 이렇듯 주한미군유지비는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땅에 미군이 없다면 우리 민중은 미군유지비라는 말 자체를 모를 것이고 우리 국민은 유지비부담을 지지 않을 거예요. 주한미군이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의 비용과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도 거액에 달한다고 보는데요.
오 일 :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비용은 연간 1,100만달러나 되고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3,800만달러에 달해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미군유지를 위한 간접비로 받아낸 이득만도 무려 67억6,200만달러나 됩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해마다 70여억달러를 주한미군유지비라는 이름으로 뜯어낸다는 얘긴데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오 일 : 미국은 주한미군유지비와 각종 보조금의 명목으로 해마다 우리 민중들로부터 50억달러이상 약탈하고 있어요. 참으로 주한미군기지는 우리 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화근이죠. 우리 민족, 민중은 언제한번 미국에 해되는 일을 한적도 없거니와 한푼도 빚진 것이 없어요. 더욱이 미군의 한국강점을 요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구요. 그런데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이땅을 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으면서 돈까지 받아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한 날강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자 : 어떻습니까. 미국은 세계의 여러곳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는 미군의 주둔이나 미군사기지의 설치가 제한부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 일 :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미군이 어느 지역을 군사기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적승인을 받고 해마다 거액의 기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만은 그러한 법적제한도 없이 저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나 임의의 시각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기지사용료 지불은커녕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 해마다 5조억원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빨아내고 있죠.
사회자 : 1억평이나 되는 제나라 땅을 미군기지로 빼앗기고도 기지사용료를 받기는커녕 거액의 미군유지비를 고분고분 섬겨바쳐야하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오 일 : 미국이 얼마나 날강도인가 하는 것은 다음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알수 있죠. 미국은 250만평에 달하는 부산미공군기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보수비, 수리비까지 약취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오산미공군기지에 100분의 1도 안되는 2만평남짓한 부분을 **으로 이용하는 한국측에 사용료를 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남에 땅을 비법적으로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인에게 땅값을 내라고 하니 이런 무례한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회자 : 미국은 우리에게 물어야할 땅값과 민중들에게서 빨아낸 혈세로 주한미군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장비의 현대화, 군사시설보강 등 북침을 위한 새 전쟁도발책동에 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그렇습니다. 미국이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미연합방위증강계획에 따라 공중공격, *****등 100여개의 군사기지와 대상건설정비보강에 10억2,500만달러를 탕진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침략자, 약탈자로써의 미국의 전횡과 날강도적 야망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안에 외국군사기지가 있으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되기 마련이고 민족의 불행을 피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군기지로 빼앗긴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하며 50여년간 받지 못한 1천여억달러에 달하는 기지사용료와 우리 민중에게 강요한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산해야합니다.
사회자 : 네, 이땅의 미군기지, 미군을 그대로 두어서는 오늘의 불행과 고통, 재난을 면할수 없고 자주민주통일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역사가 실증해주고 있는 것처럼 강점자들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민중은 빼앗긴 자주권과 땅을 찾기 위해 거족적인 반미항전에 더욱 과감히 분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발족

미군기지에서 돌 날아오고 미군은 총 겨눠



지난 16일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기지 반환 대상 중 용산미군기지가 제외되어 용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 결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용산미군기지 반환 1차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은 이 시대 가장 정의롭고 양심적인 일이며, 조국을 지키려는 민족은 제국주의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떳떳한 백성이길 위해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자≫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반미 세력은 없었다≫며 ≪반미자주 없이 민주주의도 없고, 개혁도 없고, 통일도 없다≫고 주장해 주한미군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한 최규엽 위원장은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미군기지 반환투쟁을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더욱 확대된 범국민 대중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끝까지 목숨걸고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진관 스님은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외국 군대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 점령군으로 반세기 넘게 주둔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성이 근본적으로 부정 당하는 국가적, 민족적 치욕≫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 미군의 반인륜적 행태에 철퇴를 가하고 기필코 미군들의 온갖 범죄와 오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집회가 무르익어 갈 무렵 용산미군기지 안에서 날아온 돌로 인해 한총련 소속 서구(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1) 학생과 임선미(고려대 통계학, 1) 학생은 각각 이마와 왼쪽팔에 상처를 입었다.

두 학생은 평화적 집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개했고 참가자들은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 모여 미군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항의 시위에 당황한 한 미군은 시위대를 향해 M16과 유사한 총을 겨눠 위압감을 조성해 한때 분위기는 크게 경색됐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헌병대로 연락해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별다른 마찰 없이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15번문까지 4Km가 되는 거리를 ≪용산미군기지 반환≫이라고 씌여진 풍선과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행진을 벌였다.

이 광경을 본 이정희(45, 용산5동)씨는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 나서지 못했다≫며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집회 참가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내비쳤다.

또한 이정희씨는 ≪용두사미처럼 끝내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우리 용산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보겠다≫는 다짐을 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들어라 양키야≫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집회를 마쳤다.

앞으로 운동본부(준)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용산미군기지반환 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813호

지금 내외 인민들은 제6차 북남상급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하여 금후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복잡한 정세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제6차 북남 상급회담이 겨레의 기대와는 달리 결실없이 막을 내리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되어오던 당국 대화 자체가 중단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무성의와 특히는 북남상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의 분별없는 반북대결 자세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측이 발표한 북남 상급회담 북측 대표단 성명과 제6차 북남 상급회담에 관한 상보를 통해 내외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남 상급회담 결렬 책임문제로하여 남조선안에서까지 눈총을 받고 있는 남측 수석대표 통일부장관 홍순영이 바빠나서 지난 11월 22일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 나타나 제6차 북남 상급회담이 결렬된 것이 북의 회담 자세와 관련된다느니 뭐니 하는 흑백을 전도하는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히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6차 북남상급회담에서 누가 성의를 보이고 누가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누가 회담의 결실을 바라고 누가 회담의 결렬을 바랐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까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측은 최근 남조선측이 조성해놓은 현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상급회담을 제대로 개최할 형편이 못되지만 어떻게 하나 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제5차 북남상급회담 합의사항들을 이행나가려는 의지에서 금강산에서 제6차 상급회담을 마련하고 북남사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제기하였으며 이번 6차 상급회담에서 주동적으로 공동보도문 초안도 내놓고 회담 기일까지 연장해주면서 합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처음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임하였으며 쌍방합의가 나오리라고 생각조차 하지않은데로부터 공동보도문 초안마저 내놓지 않았다.

더욱이 남측수석대표는 회담 전 기간 우리를 겨냥한 반북대결적인 비상경계조치와 무력증강, 군사훈련을 변명하는데만 급급하였으며 우리측의 정당한 추궁에 그것이 통하지않게 되자 북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는 말로 굼때고(얼버무리고) 도중에 뺑소니를 치려 하였다.

이런 입장으로부터 그는 실무급에서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을 오는 12월에 금강산에서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의 중요 사항들을 합의하고 문안까지 다 정리하여 놓은 공동보도문을 독선적으로 부정해 나서면서 무례한 언동으로 상급회담 자체를 결렬시켰다.

그는 단장 개별 접촉에 나와 통일부 장관이라는 명색에 어울리지 않게 외교관만 하다나니(하다보니) 북남관계가 이처럼 어려운줄 몰랐다는 말만 외워댔으며 제6차 북남상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합의 발표하고 돌아가면 문초를 받을 수 있다느니 빈손으로 돌아가도 좋다느니 뭐니 하면서 아무 말이나 꺼리낌 없이 탕탕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우리를 걸고 북남상급회담 결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다.

지난 다섯 차례 진행된 회담에서 좋은 공동보도문을 내놓곤 한 상급회담을 이번에 결실없는 회담으로 만들고 당국 대화 자체를 결렬시킨 장본인인 남측 수석대표로서는 사실상 북남 상급회담에 대해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남측 수석대표 홍순영이 민족의 운명, 6.15북남공동선언과 당국 대화의 운명보다도 자기 목 건사만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가 저지른 행동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으며 지금 남조선의 6.15공동선언 실천 지지 단체들이 홍순영 규탄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것을 더욱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금강산에서 제6차 북남 상급회담을 깨고 남측수석 대표가 서울에 도착하자 즉시 6.15북남공동선언 채택 자체와 현 당국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잘하고 돌아왔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홍순영이 현 당국의 통일부장관인지 야당의 통일부장관인지 가려볼 수 없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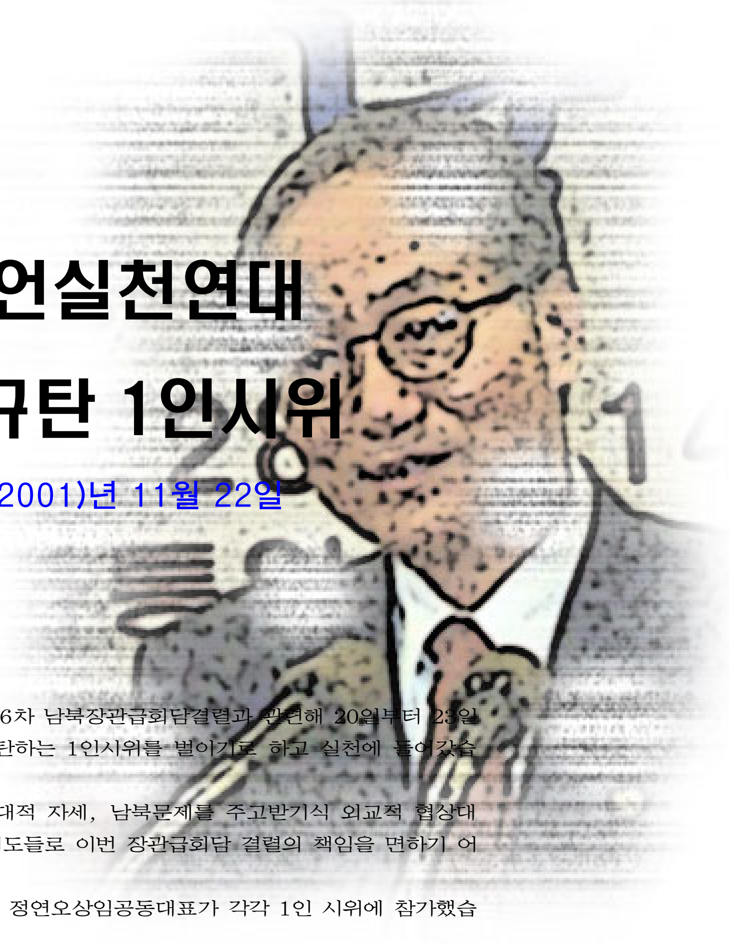
이 자체가 벌써 통일부장관 홍순영이 북남 상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이 아닌가.

우리 측은 이미 남측 수석대표 홍순영이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대해 밝힌바 있다.

그가 이제 대북 관련 정책 백서를 내놓는다해도 그것이 시종 책임회피와 사실을 전도하는 반북 대결 넋두리로 엮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뻔하다.

홍순영은 당국대화를 결렬시킨 모든 책임을 지고 민족앞에 성근히 사죄하는 길로 나와야할 것이다.

주체90(2001)년 11월 24일
평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통일부장관 규탄 1인시위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2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6차 남북장관급회담결렬과 관련해 20일부터 23일까지 매일 12시 수석대표인 홍순영통일부장관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체는 홍순영장관은 비상경계태세에 대한 사대적 자세, 남북문제를 주고받기식 외교적 협상대상화, 신뢰와 단합의 자세에 역행하는 오만무례한 태도들로 이번 장관급회담 결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20일에는 권오창공동대표가, 21일에는 정연오상임공동대표가 각각 1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같은 주장과 1인시위는 더없이 정당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됐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이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열린 이번 6차회담은 그 어느때보다도 남북쌍방이 ***하며 성의있는 ****로 사태의 근원을 제거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부터 북측은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합리적인 제안들과 함께 공동보도문초안까지 제시하고 그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북측은 공동보도문초안에서 연기된 제4차 이산가족교환방문을 11월중에,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각각 금강산에서 진행하며 ***** 끊어진 민족의 동맥을 잇고 경제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도 금강산에서 12월초에 열데 관한 문제를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그밖에 남북태권도시범단의 교환을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조치해제와 함께 빠른 시일안에 성사시키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남측단장인 홍순영통일부장관은 회담의 시작부터 결실없이 돌아갈 것도 생각하고 왔다면서 합의문초안도 마지못해 뒤늦게 내놓는 등 심히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회담 *** 통일부장관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구실로 그 무슨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무력을 증강했으며 주적론을 제창하면서 남북관계를 엄중한 상태에 빠뜨린 데 대해 심히 사죄할 대신 오히려 그것이 내부문제라느니 국제관계의 문제라느니 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으며 회담앞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만을 조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회담에서 곧 발표하게 될 공동보도문과 관련해 쌍방 실무자들이 애써 합의해놓은 내용들마저 순간에 제멋대로 뒤집고 돌발적으로 밤중에 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무례한 처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6박 7일간이라는 긴 마라톤회담을 했지만 통일부장관의 이같은 언행과 불순한 태도로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 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단장인 홍순영통일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계민중들이 회담을 결렬시킨 통일부장관을 단죄규탄하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통일부장관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심히 사죄해야하며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군부의 ≪주적론≫ 유지 발언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3일



군부는 ≪주적론≫을 즉시 철회하라는 내외여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도 국방백서의 ≪주적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애초 다음달 발행할 예정이였던 백서를 오는 2월에 발행하는데 여기에서 북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조치 등이 없어 북의 정치적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주적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장관 김동신은 19일 국방부접견에서 국방백서의 주적개념변화여부와 관련해 국방백서의 주적개념에 변화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용납못할 반통일책동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대단결선언, 통일지상선언입니다.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간에는 막혔던 대화의 문이 열리고 접촉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당국이 진심으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란다면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한 대결시대의 낡은 유물을 마땅히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는 남북간의 단합과 협력, 통일의 분위기에 대치되게 이번에 또다시 동족사이에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는 ≪주적론≫을 **히 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군당국은 북의 정치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적론을 철회할수 없다고 떠들어댔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웅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는 남침위협이 아니라 오직 북침위협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미국과 함께 북을 불의에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무력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북에서 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서 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당국이 현실과는 무관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갈 동족을 여전히 주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구와 힘을 합쳐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을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속에 칼을 품고 있는 한 남북대화가 성실히 이행될수 없고 모든 면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좋게 흐를수 없는 것입니다.

당국은 남북대결만을 고취하고 있는 반통일분자들을 즉시 제거하고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남북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진척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군당국이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방백서를 철회하지 않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앞길에 계속 장애를 조성하는 길로 나간다면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이 정도정치를 하겠다며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5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최근 한나라당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느니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술수나 정략이 아닌 정도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파렴치한 망발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보복과 갈등의 원흉이고 극악한 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이 얼굴에 분칠하고 감히 국민들을 보고 정치보복과 갈등을 극복하겠다느니 정도정치를 하겠다느니 하며 속에 없는 침발린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의 행적은 한마디로 말해 매국배족과 반역으로 얼룩졌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는 정계에 발을 내디딘 오늘까지 시종일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파쇼독재를 위해 광분했습니다. 그의 신조는 오직 이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파쇼독재체제를 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회창은 그에 방해가 되는 애국민중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것입니다.

남북협상과 남북교류를 주장하며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길을 모색했던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관도 바로 이회창이고 82년에 있었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을 극형과 중형에 처하도록 판결한 것도 당시 대법원법관으로 있은 이회창입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강화에 방해가 되는 소행은 철저히 방지해야한다며 우리 민중의 모든 반미, 반일운동을 반대하고 탄압할 것을 공안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6.25전쟁시기 감행한 미군의 양민학살만행과 매향리사격장폐쇄 국민운동마저 한미관계에 손상을 준다며 반대했고 일본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역사왜곡책동반대투쟁 역시 한일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며 반대해 국민들로부터 이회창이 어느 나라 야당총재인지 모르겠다는 응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극악한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악을 쓰며 반대하고 상호주의와 검증론을 떠들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회창이야말로 철저한 친미친일사대매국노이고 반민중, 반자주, 반통일역적입니다. 매국배족, 친미친일은 그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매국배족의 무리, 이회창의 사당으로 ****했습니다. 정치보복과 갈등, 국민분열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이회창과 그의 한나라당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갈등과 분열, 정치보복을 극복하겠다느니 정도정치를 하겠다느니하고 떠들어대니 누가 곧이 들을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같이 떠들어대는 것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하고 민심을 낚으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무리 분칠하고 공을 들이고 **해도 절대로 **가 될수 없습니다. 이땅에서 정치보복과 국민갈등을 근절하고 그야말로 정도의 정치가 펼쳐지자면 이회창부터 매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전쟁사환꾼 이회창

고려대 이봉락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8일~19일

우리 민족사에는 애국으로 그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는 애국자들도 많지만 매국과 민족반역으로 민중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역적들도 있습니다. 핵전쟁사환꾼 이회창이 바로 그런 자라 하겠는데요. 지금 이땅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이회창투쟁은 미국의 전쟁사환꾼, 특등 머슴으로써의 이회창이 저지른 죄가에 대한 민중의 분노의 표출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핵전쟁사환꾼으로써의 이회창의 정체를 고려대 이봉락씨의 글을 통해 밝혀보도록 하죠. 김현규씨 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화해와 단합에로 향하던 남북관계가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남북관계는 지난 9월 11일 미국을 강타한 테러사건이후 긴장격화에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9.11사건이후 한반도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로 전력증강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북대결책동에 적극 추동하면서 제2의 6.25전쟁을 몰아오기 위한 이회창 등 이땅의 호전집단의 전쟁책동으로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 그리고 최근 9.11테러와 관련한 보복에 그 누구보다도 지지찬양을 보낸 자가 바로 이회창이다.

지금 이회창은 미국의 한반도전력증강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이땅을 양키들의 핵무기전시장, 핵전쟁화약고로 만들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이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 바치려하고 있다.

지난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남북정상회담직후 곧바로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비하던 이회창이 주한미군이 한반도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느니 뭐니하면서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떠들었다. 심지어 이회창은 온 겨레, 온 세계가 적극 지지찬양하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시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이땅의 안보를 해칠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식민지변견으로써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특히 이회창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사건과 관련해서도 북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느니 그 누구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한반도주둔 미군전력증강이 필수적이라느니 하면서 이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불변론, 북한퍼주기론 등 반민족적인 궤변과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 철저한 검증론을 떠들며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가려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핵전쟁광신자이며 미국의 핵전쟁 머슴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자를 그대로 놔두면 이땅에는 제2의 6.25전쟁이 터지게 되고 우리 민중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그리고 언제가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낼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국민은 미국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영영 벗어날수 없다. 그러니 불의에 가차없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찌 민족반역자, 핵전쟁사환꾼 이회창을 용납할수 있겠는가.

한총련이 이회창을 핵전쟁머슴꾼, 반통일역적으로 규정하고 반이회창투쟁에 나선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자랑할만한 일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미 지펴올린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민중과 힘을 합쳐 범국민적인 반이회창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청년학생들이 선봉대가 되어 대학가와 공단, 성당과 거리, 이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이회창투쟁의 함성이 터져나오게 하자. 하여 거족적인 반이회창투쟁의 불길로 미국의 핵전쟁사환꾼인 이회창을 매장하고 이땅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가셔야 할 것이다.

네, 친미사대매국노 이회창의 존재자체가 민족의 수치가 아닐까요. 이러니 전쟁광신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땅에서 핵전쟁의 참화는 절대로 피할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반이회창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는 건 지극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죠.



최대의 위험분자 이회창

언론인 김진수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0일～22일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며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서는 반통일패당의 수괴가 바로 이회창이라고 하겠는데요. 이회창은 유기체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할겁니다. ≪최대의 위험분자 이회창≫ 언론인 김진수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자주권이 없으면 산송장과 다름없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직업이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 나로써는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겠는가 하는데 관해 깊이 생각해보곤 한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도 문제이지만 그에 아부굴종, 신주모시듯 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문제이다. 한나라당의 총재 이회창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문득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나에게 질문하던 말이 생각난다. 국민의 비등된 통일열기에 대해 한참 설명하는데 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이회창총재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남북공조가 아니라 한미공조를 해야한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때 그것은 이회창이 친미사대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사실 민족내부에 그런 친미분자가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특히 이회창은 가장 위험한 친미사대매국노이다. 그에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오직 미국에 잘보여 미국의 환심을 사는데만 관심이 있다.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민족문제를 남북이 공조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은 민족의 피가 한방울도 없는 식민지 매국노의 어리석고 비굴한 작태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이회창이 저들 패당의 대북정책이 부시미국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다고 쾌재를 올리고 있는 것도 그렇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강경책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극대화해 침략정책을 실현할 야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에 있지도 않은 미사일위협소동을 일으키고 상용무력철수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북을 고립압살, 무장해제하고 침략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민족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분격하고 배격할 미국의 침략정책이 저들의 정책과 일치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회창의 친미사대행위가 어느 지경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회창은 남북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국침략자의 관점에서 보는 반역아이다. 이회창이 지금 남북관계의 화해를 적극 반대하면서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도 미국이 떠드는 북에 대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그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눈꼴 사나운 짓을 계속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차기 대권욕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그러니 이회창은 더욱 위험하다. 미국은 한국의 어떠한 자주권행사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미국과의 사전합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에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 한미정상회담시 기 부시의 질책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한러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은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의 유지를 지지했지만 미국의 말한마디에 스스로 부인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그런데 더욱 분개스러운 것은 이회창이 이에 대해 미국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외교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괴뢰주의찬양론까지 거리낌없이 들고 나오는 것이다. 수치도 모르는 친미사대매국노의 얼빠진 넋두리라하겠다.

하기에 그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한반도평화보장에 안전판역할을 한다며 주한미군철수불가론을 염불처럼 외우고 있다.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침략자들에게 멸사봉공하는 것이 이회창이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매국역적행위인가.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 과연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을까. 천만에.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처럼 무르익어가던 남북화해분위기도 냉각되고 한반도정세는 더욱 긴장해지게 된다. 특히 그는 미국의 사주밑에 한반도에 전쟁의 불을 지피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수 것이다. 어찌 친미사대매국역적을 더이상 좌시, 묵과할수 있겠는가. 민족이 살고 민중이 살자면 이런 매국역적을 들어내야 한다.

나는 우리 민중의 자주권을 위해 주한미군철수투쟁과 함께 이회창제거투쟁에로 학생들을 교양하면서 나 자신이 그 선두에 서리라 굳게 마음 다졌다.



네,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죠. 통일의 암인 이회창도 그 독소가 더 퍼지기 전에 매몰해 버리는게 상책이라 할겁니다.

시대착오적인 행위

동국대 이순길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8일~19일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 속에서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이적단체규정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 이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고 민중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나는 이 현실앞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민중의 요구를 거역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중적인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관계당국은 구태의연하게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단체라는 당치도 않은 딱지를 붙이고 애국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의 의로운 활동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걸어 수배, 연행, 체포, 구속하는 탄압책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도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까지 당국은 이적단체니 보안법위반이니 하는 따위의 명에를 씌워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관계당국의 이같은 횡포는 결코 정당화될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협약하고 그 이행에 힘차게 나서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공안당국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애국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을 각종 죄목에 걸어 철창속으로 마구 끌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극악한 반통일적 행위인가.

나는 공안당국의 이 **할 행위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흉악한 저의를 다시금 밝히지 않을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당국은 한총련을 비롯해 통일애국단체들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고 애국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가로막아 나섬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각계민중의 조국통일지향과 의지를 꺽어보려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만고대죄라고 본다.

일찍이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민의를 거역한 자들이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은 적 없다. 그렇다. 역사의 이 철리앞에서 공안당국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민중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해야한다. 이와 함께 애국학생들과 각계인사들에 대한 수배를 철회하고 연행, 체포, 구속한 모든 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시대와 역사, 민중의 부름앞에 떳떳이 나서는 이 길만이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민족구성원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며 애국의 길, 통일의 길에 한몸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짐하면서 교문을 나섰다.

네, 민족구성원으로써 시대와 역사, 민중의 부름앞에 떳떳이 나서는 길만이 참된 애국의 길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애국의 길, 통일의 길에 한몸 바쳐 나가겠다는 이순길씨의 결의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통일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범민련 방북 구속자 5인, 4차 재판 열려



통일부가 지난 8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2001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일원의 행사 참관은 물론 각 부문간의 모임에 대해 사실상 ≪포괄적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져 통일대축전에 참관했다 구속된 범민련 회원 5인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범민련 회원 5인의 재판에서 검찰측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의 김명상 교류협력 2과장은 이같이 진술했다.

김명상 과장은 범민련의 방북에 대해 개별 단체의 성격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추진본부 차원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으나 범민련이 추진본부 내 통일연대 소속 단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명상 과장은 통일부는 북한이 단독으로 2001 통일대축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공동행사로 개최되는 것을 근거로 방북신청을 허가했으며 개별인사들에게는 ≪공동행사의 참관 자격을 부여해 방북신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증언은 남북이 사실상 2001 통일대축전의 주최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통일부가 인정한 것이며 결국 문제는 행사 장소 문제였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벌였던 행사 장소문제에 대해 김명상 과장은 ≪≪노동당창건 55돌과 같이 참관자격으로 와도 좋다≫는 북측의 마지막 팩스의 내용을 북측 추진본부가 공동행사장소에 대한 변경의지로 받아들여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해 당시 장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방북승인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방북당일인 14일 통일대축전 참관시 ≪정치적 발언을 않는다는 것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리는 일체의 행사에는 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각서를 김종수 방북단 단장,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종단 실무책임자), 조성우 범국민민족화해협의회 집행위원장(민화협 실무책임자), 한충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통일연대 실무책임자) 등 책임자 4인에게 받았다고 김명상 과장은 증언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의 노주식씨는 지난 8월 14일 방북교육을 자신이 했으며 그 자리에서 ≪북측이 연방제 통일방식 또는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많아 자칫 정치행사로 이용될지 모르니 유의하라≫는 내용과 ≪3대헌장기념탑은 북한의 통일관인 무력적화통일을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변호인측의 ≪3대헌장 기념탑에서 적화통일 의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보라≫는 질문에 ≪북측에서 주장하는 자주는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이며 민족대단결은 자신들과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권오헌(양심수 후원회) 회장은 방북교육장이 어수선한 관계로 교육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각서≫와 관련해서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지도부가 통일대축전 참관을 놓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권오헌 회장은 통일대축전 참관은 ≪3대헌장 기념탑을 지지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의지를 담아 대회에 참관했었다고 밝히고 정부가 대회장소에 대해 권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주최인 남북의 추진본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 증언에서 권오헌 회장은 ≪민간통일운동은 다소 소홀했던 남북 당국자 관계를 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에 대해 보수언론과 야당정치공격에 밀린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남북문제는 실정법체계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해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당초 이날 증인으로는 방북단 단장이었던 김종수 신부와 변진흥 사무총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질 못했다고 변호인단측은 밝혔다.

이날 재판을 참관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웃긴다≫, ≪재판이 장난이냐≫ 등 조소를 금치못했다.

범민련의 민경우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무죄가 명확해 기소 자체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과 야당이 결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사건인만큼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현 상태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재판이 끝난 후 구속자 5인의 변호를 담당했던 심재환 변호사는 ≪아직 많은 사실확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우나 오늘은 통일부가 일관성있는 답변을 하지 못해 우리쪽이 유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범민련의 이종린 의장은 ≪개폐막식 참가자가 360명이나 되는데 범민련 회원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범민련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1월 초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범민련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방북과정과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이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진술에서 벗어나 사실 진위를 정확하게 밝히게 된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인측의 증인으로는 당시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손장래(민화협) 상임의장과 한충목 집행위원장, 김보애(NS 21)씨, 안영민(민족 21)기자 등이 나올 예정이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4

2001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고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허리가 두 동강나는 아픔을 겪어 왔다. 반만년의 오랜 시간동안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반세기란 오랜 세월이 아닐 수 있으나 민족 앞에 나선 고통은 참혹한 것이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한 남과 북은 분열의 쓰라린 고통을 어루만지며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남과 북의 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되면서 온 겨레의 통일염원은 날로 거세어만 가고 있다. 상봉과 공동행사로 굳게 잡은 손들이 늘어만 갔고, 남북의 대단결을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된 지 1년여만에 추진된 2001 민족공동행사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각계 대표가 대규모로 상봉한 역사적인 회합이었으며,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의지를 한자리에 모아 이후 발전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로 되었다.

그러나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격려와 노고에 대한 치하대신 ≪친북≫, ≪이적≫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인 채 차디찬 감옥으로 끌려가야만 했다.

대표단 전체를 보내줄 때는 언제고, 돌아오자 차가운 감옥안으로 가두는 당국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강정구, 김규철, 김세창, 문재룡, 박종화, 임동규, 전상봉. 구속된 7명은 통일연대를 비롯한 각계의 대표로 합법적인 방북허가를 받고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남과 북이 약속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철저히 입각하여 활동을 해 왔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의지를 상실한 행위이며,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구속사태에서 우리는 당국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분단세력들의 공세에 부응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방북대표 7명 중 6명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가입과 잠입 탈출죄를 적용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방북대표단을 탄압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합법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해 강령규약 수정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새삼스럽게 이적단체를 들먹이며 탄압하고 있는 당국의 태도는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동안 남북해외 3자간의 연대를 위해 노력해 왔던 범민련에 대한 일체의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핍박하는 한,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통일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라고 하는 한, 어떻게 남북이 통일을 위해 허심하게 대화할 수 있겠는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실천적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온 겨레의 의혹에 당국은 답변을 해야 한다.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당국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며, 남북사이가 화해와 단합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선언하는 조처로 될 것이다.

당국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계속 힘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1년 11월 23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전국빈민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예술인총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광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반미여성회, 불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회, 전대협동우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2001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대표 즉각 석방과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에 대한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 지지성명서

지난 8월 15일,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분단 반세기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민족통일대축전을 평양에서 이루어내었다.

2000년 7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사상이나 이념, 종교를 뛰어넘어 이에 합의하는 세력이라면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통일의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정부차원의 회담이 중단된 중에도 민간에서부터의 교류의 물꼬를 지속적으로 틔워 나가고, 이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전민족이 함께 이루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후 행사를 끝내고 남았던 것은 철폐되어야 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이적규정 적용으로 인한 귀국방북인사들의 구속이었다.

이에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는 아직까지도 방북인사들이 차가운 감옥에 묶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현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자주적 민족통일의 염원으로 통일대축전을 힘있게 치루고 온 인사들을 잡아가두는 나라, 미국의 전쟁상황으로 인해 자국 내에 비상경계태세 조치를 취하며 대결구도로 가는 나라, 과연 이 나라가 주권이 있는 나라이며, 정부는 통일에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2년, 그리고 심사서류를 제출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김영삼시절 열사들의 명예회복이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또한 방북인사들의 구속과 함께 보수·우익 세력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바이다.

두 정상이 만나서 손을 잡고, 민간인들이 이미 휴전선을 넘어 만나는 지금, 구속동지들의 공판을 접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열사의 이름을 걸고 국가보안법 철폐, 보수·우익세력 척결의 길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열사의 염원이다, 당국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2001년 11월 24일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

김건수선배1년4개월의 실형선고에 대한 동부총련 성명서



지난 11월 26일 우리의 선배 김건수 동지의 선고 공판에서 실형 1년 4개월이 선고된 것을 보았다. 결혼을 앞두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그것도 3년이 지난 학생운동과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혐의가 한 가정을 파탄내고, 젊은 청년의 앞길을 막을 만큼 큰 범죄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공안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 615공동선언 이후 북을 적이 아닌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시각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조속히 철폐해야 할 대상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게 유연하게 하지 못하고,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먼저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은 아직도 공안기관의 입맛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법으로 말미암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시민들,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사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처사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현실과는 맞지않는 법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불공정할 뿐더러, 조국의 통일과 이 사회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의 입을 막으려는 데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국가보안법으로 이땅의 젊은이를 두번씩이나 가두고 실형을 살게 한다는 것은 이 시대 양심과 관용, 그리고 인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총련은 백만학도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이다. 백만학도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주요 간부직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런 합법적인 대중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한총련은 바로 백만학도의 힘으로 건설되는 것이며,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백만청년학생들을 탄압하는 행위인 것이다.

투쟁의 불사조 경기동부총련은 이런 학생운동탄압과 한총련이적규정을 아직도 들이대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하려는 김대중정권과 수구보수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이 불어쳐도 꿋꿋이 조국과 민중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 길에 함께 가던 동지를 가둔 적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우리는 동지가 한번 잡혀가면 나올 때까지 투쟁하였던 것이 자랑스런 기풍이며, 언제나 역사의 정방향을 향해 투쟁할 것이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백만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을 탄압하는 이적규정을 철회시키고 우리 동지를 구출할 때까지 투쟁의 불사조 경기동부총련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김건수 동지를 석방하라!
학생운동 탄압하는 한총련 이적규정 즉각 철회하라!

2001년 11월28일
투쟁의 불사조 7기 경기동부총련

신종검열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사이트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왔다. 문제는 그 요구를 이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KIDC 등 IDC·서버호스팅업체와 온세통신 신비로 등 회선제공업체에 요구했다는 점.

그러나 회선제공업체 또는 IDC·서버호스팅업체가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정보의 삭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 들 뿐이다. 실제로 이 요구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 및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통일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홈페이지는 3시간 가량 중단되었다.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홈페이지들이 복구되었으나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 30일 폐쇄당한 이반시티닷컴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조치의 위력을 볼 수 있다.

삭제권한도 없는 회선제공업체 또는 서버호스팅업체(IDC업체)에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검열 행위이다. 국내에 몇 안되는 최상위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경우 게시물 몇개 때문에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줄줄이 폐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진보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11월부터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만큼 진보하는 국가 검열



기술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인터넷은 인류역사상 가장 완벽한 표현의 수단이다. 누구나 비용이나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 없이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편집자의 개입은 최소화되었다. 그 전파 속도와 범위는 어떤 매체보다 신속하고 넓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우리는 뚜렷이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표현의 자유는 선언뿐이었다. 선언과는 별개로, 표현의 물적 수단은 줄곧 언론과 권력의 것이었다. 이 불균형은 인터넷의 발명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 만이 ≪표현≫으로 인정되었지만, 인터넷의 등장 이후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표현들 -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모든 종류의 표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여기서 국가 권력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자신들이 규제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의 강력한 저항이 이에 맞서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온 기준으로는 ≪불법≫, ≪불온≫, ≪유해≫(청소년유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할때 ≪불법으로서의 음란≫과 ≪불온으로서의 음란≫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음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불온≫ 정보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반국가적≫ 혹은 ≪미풍양속에 위배≫하는 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반사회적≫이라거나 ≪불건전≫의 개념도 이에 속한다.

컴퓨터 통신은 1980년대 말부터 다른 어떤 매체보다 상당히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큰 매력으로 느낀 이용자들에 의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것은 공안당국이 보기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이적표현물≫을 이유로 ≪불온한≫ 통신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랐다. 예를 들어 1994년에는 서적으로도 출판된 바 있는 ≪붉은산 검은피≫와 ≪공산당 선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회원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다. 이에 정부는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왔고 1996년에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법정 기구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최근에는 ≪불온≫보다 ≪청소년유해≫라는 기준이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결정은 많은 저항을 낳고 있다. 지난 6월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과 부인의 누드 작품을 그려서 올렸다. 그는 체포되었고 그의 홈페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자퇴한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아이노스쿨≫(inoschool) 홈페이지는 ≪청소년들이 자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 또한 동성애는 그 내용의 음란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다.

최근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보다 완벽하게(!)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열 방식이 등장했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국내의 청소년유해매체 사이트에는 PICS라는 표식을 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 차단 소프트웨어는 PC방, 학교, 도서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의 차단 소프트웨어는 등급을 달지 않으면 차단하는 것을 기본(default)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홈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의 홈페이지가 정부의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혹시라도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표식을 달아야만 한다. 자신의 홈페이지가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정부의 기준과늘 비교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기술적인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일괄적인 방식의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PC방, 학교, 도서관 등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동성애 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홈페이지에 대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의 접근도 차단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의 인터넷에 대해서는 정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여부를 판단하고 PICS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많은 해외 인터넷들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인터넷 접속점을 통제하는, 대단히 위험한 검열일 뿐이다.

지금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등급제가 ≪기술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기술적 방식≫이 ≪자율적≫인 방식이며 규제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분명히 법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홈페이지지만 유통하라≫는 노골적인 문구는 없으며 단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홈페이지는 픽스(PICS) 등급을 달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하여 내년에 사회단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가상시나리오로 꾸며보면 아래와 같다.

새민주노동연대(가칭)라는 사회단체는 홈페이지에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접수하였다. 때마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선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실태파악에 나선 이 단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가 깔린 많은 PC방, 학교, 도서관에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등급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에 등급을 달지 않는 홈페이지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을 달지 않은 홈페이지도 청소년유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차단할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이용자 선택의 문제≫라며 발뺌할 뿐이었다.



현실 사회의 문제를 매체의 문제로 보지말라

물론 지금 인터넷에는 여성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 여성과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많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 존재한다. 즉 그것은 현실 사회의 문제이며 인터넷이나 매체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와 노동착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가 ≪애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그치면 된다는 매체 규제 위주의 발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다. 19세 미만까지의 원조교제는 엄단하는 시늉을 하면서 20세 이후의 매매춘은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 인터넷만 규제한다고 과연 원조교제가 사라질 것인가? 의무교육 이후 방치된 청소년과 공교육이 책임지지 못한 자퇴, 가출 청소년들이 일찌기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회성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서적들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여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인가?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인터넷의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 사회의 법과 제도를 정말로 엄격하게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맞추어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검열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월간≫민중의 소리 webzine@kndic.com

인터넷 내용등급제 절대 못 따른다

시민단체 한달째 단식농성 ≪위헌 소송 불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릴레이 단식 농성이 시작된 지 한 달을 넘어서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고 새롭게 통제 대상이 될 홈페이지와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커뮤니티였던 엑스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최후의 협박성 통첩을 받은 이후 엑스존의 음란성을 인정하고 전자적 표시를 하라는 방침을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잠정적 폐쇄를 선택했다.

또 내용등급제에 대한 철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웹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에 대한 전자적 고시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경우 PC방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들 사이트로의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진보적 사회단체의 컨텐츠들이 ≪불온≫한 것으로 분류돼 온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사이트가 스스로 ≪청소년 무해 사이트≫임을 고시하는 것도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입장을 표명해 오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 컨텐츠의 건전성을 분류,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국가감시 제도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60일 1인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22일.

진보적 사회단체와 동성애자 모임, 인권운동단체, 민주노동당 등을 포함, 30여 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즉시 폐지와 정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며, 더구나 ≪사실상 정부 기관이나 다름없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자위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등급 표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홈페이지와 인터넷 컨텐츠는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2개의 등급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달아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자율≫을 가장한 ≪강제≫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항하는 등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임승곤 기자 yimsg@koit.co.kr 2001/11/25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단식농성 돌입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수은주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항의하며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 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회견에 함께 한 이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은 기술적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통윤이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통윤이 민간심의기구를 자칭하고 있지만, 정통윤은 국정감사를 받을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심의 대상이기까지 하다≫며 ≪정통윤은 민간 자율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에 나온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동성애자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형사 처벌 협박은 음란성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억지≫라면서 ≪근거 없는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엑스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정통부·정통윤에 대해 ≪공개질의서 발송·단식농성·항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통부·정통윤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 대표 단식농성장 주변에서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60일 동안 진행된다.

심태섭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11월 28일

≪인터뷰≫ 노동 사회 시민 청년단체 결집 재창당 시동

지방선거 대선 적극 참여 … 울산 등 일부 광역선거 당선기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연합, 시민단체 등 국내 진보세력을 결집하는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 결집 재창당의 전제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며 ≪개방적인 재창당론≫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현시점은 3김 정치 청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정치세력의 대재편기로 진보 세력이 반드시 가시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할 때≫라며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세력 대통합을 거론한 이유는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확산에 대한 저항이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국내에서도 진보세력이 정치세력화를 이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김정치의 청산을 위한 정치세력의 대재편기에 진보세력이 힘을 모아야할 시점이다. 현재는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중심이 되야 한다. 진보세력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결집해 진보와 보수의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입장차이를 좁히기 힘든 세력간 결집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 그렇지 않다. 지난 14일 ≪진보정당과 2002년 양대선거≫ 토론회에서 결집을 제안했을 때 각 세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사회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전체 진보세력이 연대를 하면 사회당도 당연히 결합할 것이다.

시민단체와는 시민운동 고유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참여를 결의한 환경연합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대비 전략은

▲ 우리당은 이미 지난 2월 당대회에서 대선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창당 논의는 그 연장선상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울산시장선거에 집중했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광범위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

울산시는 당선을 목표로 두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내부적으로 부산대 김석준 교수를 후보로 내세울 계획이다. 서울시 후보자는 아직 논의중이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활동 및 10 · 25 재보선을 평가한다면

▲ 우리당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일상적인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고 중점사업 중심으로 당의 독자적 사업을 펼치겠다. 재창당 사업과 당의 사업은 별도다.

재보선은 보궐선거의 특수한 상황에서 선전했다고 본다. 다만 여여 정당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선거법 개정은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텐데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 우선 현재 여당이 준비중인 일본식 정당명부제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높일 것이다. 1인2표제라고 아무것이나 정당명부제로 볼 수 없다. 우리당은 전국단위 정당명부제 도입을 촉구할 것이며 내달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각종 집회와 전국단위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사업이 예전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실사구시적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나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한동안 논쟁적 정책과 과제를 중심에 뒀지만 이를 탈피하기 위해 현재 정책팀의 재구성을 학계 등과 논의하고 있다.

글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사진 권우성 기자 kws70@ngotimes.net
시민의 신문 2001년 11월 28일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0일~22일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입니다. 조국통일에 제일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조국통일을 담당해야 할 주인도 우리 민족입니다. 조국통일을 이루자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오일씨 모시고 얘기드리죠.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건 자주적 통일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땅의 우익보수세력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 속에서는 망국적인 외세와의 공조를 제창하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그럼 먼저 왜 민족공조를 해야 하는가하는 것부터 얘기됐으면 합니다.
오 일 :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이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동족과의 공조, 다시 말해서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겁니다. 민족공조를 해야 하는 건 우리 온 겨레의 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민족만이 담당수행할수 있는 우리 민족자신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나라의 통일을 절절히 염원하는 것도 우리 남북민족이고 또 통일된 한 강토에서 살아야 할 사람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죠.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끼리 공조를 해야 합니다.
사회자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전망이 열려져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만큼 온 겨레가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야 할겁니다. 민족공조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는건데요.
오 일 : 그건 우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에 의거한 나라의 통일을 운운하는 반역행위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건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떤 외부세력이 개입하거나 간섭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내맡기거나 외세와의 공조로 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건 지나온 오랜 기간 민족수난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교훈인 거예요.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해 해결해나가려 한다면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외세는 없어요.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해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합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해서 실현하려는 사대망국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과 함께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외세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말고 그와 단호하게 무자비한 투쟁을 벌여야합니다.
사회자 : 민족공조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온 민족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단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일 : 네, 그렇죠. 민족공조를 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 민족, 우리 겨레 자신들이죠.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써 민족대단결이 필수적이예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단결을 떠나서는 민족공조가 이루어질수 없고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수 없어요.
지금 남과 북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해서 차이점이 많아요. 하지만 나라의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위업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결코 민족공조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되지 않는거예요. 우리 민족의 각이한 계급계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가르지 말고 그것이 민족공조를 이룩하는 요구보다 더 중시될수는 없는거죠. 진정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남과 북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거나 계급계층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거죠.
사회자 : 민족공조냐, 외세와의 공조냐 하는 건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땅엔 외세와의 공조를 부르짖으면서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사대매국집단, 반통일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죠.
오 일 : 네, 그래요. 그 대표적 세력과 집단이 바로 민중들속에서 역적당이라고 불리우는 이회창



한나라당과 보수패거리들이라 할수 있어요. 한나라당으로 말하면 이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에 기생해서 민족분열과 사대통치로 연명해 가려는 우익보수세력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 집단인 거예요.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지난해 4.8합의서가 나왔을때부터 불에 덴 망아지마냥 계속 날뛰면서 평양상봉이 시기상조니 북의 통일전략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라느니 하면서 반기를 들었죠. 6.15공동선언이 채택됐을 때에는 북에 굴복하고 이용당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거부해 나섰어요. 시기상조니 굴복이니, 이용이니 뭐니하는 건 언어도단이고 시대의 요구와 우리 겨레의 요구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회자 : 네,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됐습니다만 6.15공동선언의 기본핵이 민족자주가 아닙니까.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걸 공동선언의 첫조항에 명기했는데요. 이건 사대매국으로 망국과 분열의 치욕을 강요당한 수난에 찬 민족사의 교훈과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된 나라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거죠. 그런데 이회창한나라당패거리들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은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큰일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것을 반대해 나섰죠.

오 일 : 그들은 공동선언의 자주조항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수 있다느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칠수 있다면서 공동선언을 반대했고 미군의 영구주둔, 미국과의 안보협력강화를 떠들었습니다. 더욱이 참을수 없는 건 동족과의 공조가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3자공조를 해야한다고 떠들었는데요. 이건 이회창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는 순간도 살아갈수 없는 사대매국노들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그들의 몸에서 민족의 피가 한방울이라도 흐르고 그들의 머리속에 동족의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고해도 외세와의 공조를 떠드는 것과 같은 사대주의망발을 늘어놓지 못할 거예요. 외세와의 공조를 떠드는 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전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행위입니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양립될수 없듯이 민족공조와 외세와의 공조는 절대로 양립될수 없어요.

사회자 :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공조, 민족대단결의 길에 우리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제창하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을 비롯한 우익반통일보수세력을 단호히 청산해야하죠.

오 일 : 남북민중앞에는 민족공조를 실현할수 있는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어요. 이미 70년대에 남북의 합의로 발표한 조국통일3대원칙이 있고 지난해 발표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있어요.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면 민족공조도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성업도 하루빨리 앞당겨질겁니다. 민족공조는 우익보수세력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반역행위와의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 철저히 실현될수 있습니다. 온 겨레가 자주적 통일을 위해 굳게 단합해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때 민족공조도 이루어지고 외세의존적이며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아 나서는 우익보수세력도 ******질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면 민족공조, 대단결의 길에 한사람같이 합류해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외세와의 공조를 떠드는 자들은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역적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언동에 대해서 제때에 된타격을 가해서 두번다시 망발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겁니다.

노농대중은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0~22일

사회자 :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민족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먼저 최근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운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윤정원 :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고 겨레의 통일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때에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운동도 그 어느때보다도 가열차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을 맞으면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과 남북농민통일대회에서 노동자, 농민대표들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할 굳은 결의를 천명하고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노동자, 농민들은 통일연대와 전국연합, 한총련을 비롯해 전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쟁취하고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감으로써 통일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수행하고 있어요.

사회자 : 그리고보면 그날에 다진 결의대로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있다는 얘기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점에서 볼때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노동자, 농민들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해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진범인인 외세와 그와 맞장구를 치려는 보수우익세력을 비롯한 반통일분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올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6.15남북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외세를 배격하고 노농대중이 일치단결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서 민족공동의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데서 앞장에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사회자 :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민족앞에 부과된 가장 절박한 과제일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이 담당 수행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고 볼수 있잖아요.

윤정원 : 그렇죠.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건 더이상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인 그리고 지상의 과제입니다. 분열이 길어질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나아가서는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이 커지게 돼죠. 특히 노동자, 농민들은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은 고사하고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에서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거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에서 더욱 헤매이게 될 겁니다. 그런만큼 조국통일은 노동자, 농민에게 있어서 가장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거죠. 이로부터 노농대중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회자 : 그러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노농운동단체들은 무엇보다 노동자, 농민들속에 조국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노동자, 농민들로 하여금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여기에 자신의 참된 삶이 있고 민족의 부강번영의 길이 있고 그리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길이 있다는 걸 철저히 인식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거죠. 당면해서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와 농민들간의 연대연합, 노농대중과 각계층민중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것 역시 조국통일의 길을 그만큼 앞당기는 것으로 되잖아요.

윤정원 : 그렇죠.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와 농민들간의 연대연합, 노농대중과 각계층민중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주체적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은 어느 한 계급과 한 계층만이 아니라 민족의 분열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민족구성원모두가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투쟁의 요구이며 이같은 투쟁은 노농대중과 각계층 민중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만큼 여기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할거예요. 노농운동단체들은 특히 연대연합을 이루는데서 주목을 같이하고 ****을 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하고 견해상, 투쟁방법상 차이가 있다고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하죠.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이라는 하나의 투쟁목표아래 노동자, 농민들간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노농대중과 각계층 민중과의 연대연합을 이루고 단결을 도모해서 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도록 올바로 이끌어나가는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자 : 현시기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거라고 보겠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아시다시피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보수우익세력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훼방하며 극력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민중의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요인일뿐 아니라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농대중이 지난날의 투쟁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에 토대해 더욱 굳게 단합해서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거예요. 단결은 노농대중의 힘의 원천이고 승리의 열쇠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된 역량으로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할겁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이십니다. 조국통일에 누구보다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야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미국이 떠드는 북미사일위협소동 그 저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20일~22일

지금 미국은 앉은 자리에서 세계 어느 곳이건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핵미사일을 비롯해서 수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미국이 북으로부터의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김현규씨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인류는 21세기가 반드시 평화와 안전의 새 세기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 세기적 염원은 새 세기의 도래와 함께 출현한 부시 미국 행정부에 의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시행정부의 패권정책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세계제패의 야망실현에서 극동지역 즉 한반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넘겨 받은 첫시기부터 부시행정부는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이북에 있지도 않은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한반도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켜 미사일방어체제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열하게도 북미사일위협소동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북의 미사일기지들을 ***공개하는가하면 북의 대포동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타격할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북이 핵폭탄 4개내지 5개를 제조할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내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셈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으며 미국땅에 화살한개 날린 적이 없습니다. 설사 이북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해도 미국으로부터 1만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북의 미사일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최대의 핵대국, 미사일대국입니다. 미국은 수많은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도처에 배치해놓고 이북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핵단추가방을 가지고 있는 부시도 얼마전에 미군부실태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고에 2만개나 넘는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많은 핵무기는 해서 무엇하는가라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 및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강도적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저들의 미사일위협은 당반위에 올려놓고 있지도 않는 북미사일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한반도정세를 대결국면에로 몰아넣어 이북을 반대하는 또 한차례의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아시아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과 그 주변의 10만여명의 해군력과 1,700여개의 핵무기, 수많은 미사일, 각종 전투기들과 방대한 군사장비들을 배치해놓고 북침기회만을 노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것을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때문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의 붕괴로 그러한 위협이 없어져 구실을 잃게 됐습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변이 도래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사태발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확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지난 냉전시기 이북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나라들까지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이북과 연이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을 지지환영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한반도통일의 암적 존재인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해 나서고 있습니다.

대내정세의 변화로 미국은 한반도주변에 자기의 군사력을 증대시킬 구실은 물론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못박아 둘 구실마저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여기서 불안을 느낀 부시행정부는 어떻게하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되고 있는 한반도를 지배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북미사일위협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미사일위협을 구실로 한국과 그 주변지역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유사시에 침략무력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망라한 69만여명으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일본의 오끼나와, 미국본토의 해병주둔군을 비롯한 각종 함정 160여척과 ≪에프16≫전투폭격기 등 1,600여대의 전투기를 비상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은 한국에 ≪비1≫폭격기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고 야간특수작전에 들이밀 ≪엠에이취47이≫ 헬기를 끌어들였으며 요격미사일이 장비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비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연합특공훈련, 대규모해상기동훈련,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훈련 등 각종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였습니다.

현 사태는 미국의 부시행정부야말로 저들의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광신적인 호전분자들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북미사일위협소동을 떠들어대는 또하나의 목적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기어이 수립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은 처음부터 세계적 범위에서 배격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북미사일위협설입니다.

미국은 북미사일위협으로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강경매파들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이 러시아에도 위협으로 되며 따라서 저들의 미사일방어노력이 러시아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꾀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21세기의 군사적 힘으로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고안해 낸 것이 미사일방어계획입니다.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핵 및 미사일의 절대적 우세로 다극화를 주장하는 대국들을 제압하고 세계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것이 미국이 노리는 전략적 목적입니다.

이런데로부터 미국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세계적 판도에서 몰아와 대국들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위해 구소련과 체결했던 1992년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수정 또는 파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무력에 더욱 의존하는 길로 나갈수 있으며 결국 여기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나라들도 불가피하게 군비경쟁에 말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려드는 나라들은 커다란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미 냉전시기 별세계 전쟁계획을 통해 군비경쟁으로 구소련을 붕괴에 몰아넣은 미국이 오늘에 와서는 별세계 전쟁계획의 재판인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통한 군비경쟁으로 일국화에 도전하는 대국, 러시아와 유럽나라들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저들의 군수독점체의 활로를 열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경제는 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산적자,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장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군수독점체들의 생산을 늘리는데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약 3년동안에 320억달러이상이 탕진된 전략***실현에 참가해 막대한 이득을 본 미군수독점체들은 600억내지 1,000억달러가 드는 미사일방어체제수립에서 또 한몫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체제에 가담한 나라들도 군수품을 주문하게 됨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순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동맹국들이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이 타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이라는 낚시로 북침도발과 미사일방어체제완성이라는 두마리 고기를 낚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이북을 엄중히 위협하면서도 도리어 그 책임을 이북에 넘겨씌우려는 미국의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세계지배야망을 버리고 어리석은 이북의 미사일위협소동을 그만두어야하며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각계국민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미국이 제아무리 북미사일위협을 떠들어도 그에 속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미국의 검은 속셈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의 날

민주주의 치욕 53년 국가보안법규탄대회

1. 대회의 의의와 목표

① 현 김대중 정권과 정치권은 급격한 보수화의 성향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를 역행하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등 보수수구세력의 국가보안법 부활 음모를 파탄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온 국민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회이다.

② 상반기에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등이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올 하반기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무리한 조작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공안탄압기구들은 규모를 과거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안탄압 분쇄 투쟁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를 폭로하는 대회이다.

③ 국가보안법이 제정 53주기를 맞이하여 냉전시대의 낡은 체제와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인간의 기본권 옹호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임을 각계 각층의 공통된 의견으로 힘있게 모아내는 대회이다.

④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의 조직을 재 가동하고, 개혁입법의 쟁취와 수구보수화에 반대해나가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이다.

2. 대회의 기조

- 국가보안법 제정 53주기 규탄행사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여 중앙은 조직강화의 내용과 더불어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만들어내고, 지역은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에 나서는 실질적인 대중적 토대를 구축한다.
- 국가보안법 제정 53주기 규탄을 주 선전내용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반민족성, 반통일성, 반인간성을 강조하여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결정적인 방해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확산해낸다.
- 올 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사례들을 적극 알려내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는 공안기구들을 규탄하고, 탄압받는 단체들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여론을 높여내는 계기를 마련한다.
- 한총련, 범민련 등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중단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3. 대회의 방식

- 전국동시다발 :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대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낸다.
- 수도권은 서울 영등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여의도로 행진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가 주최하고, 지역은 지역별 핵심 연대단위가 주관.

4. 핵심구호

- 민주주의 치욕 53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 정치수배해제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 국정원 등 공안탄압기구 해체하라
- 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라

5. 대회 기획(안)

장소, 일시 : 2001년 12월 1일(토) 오후2시 영등포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 (정리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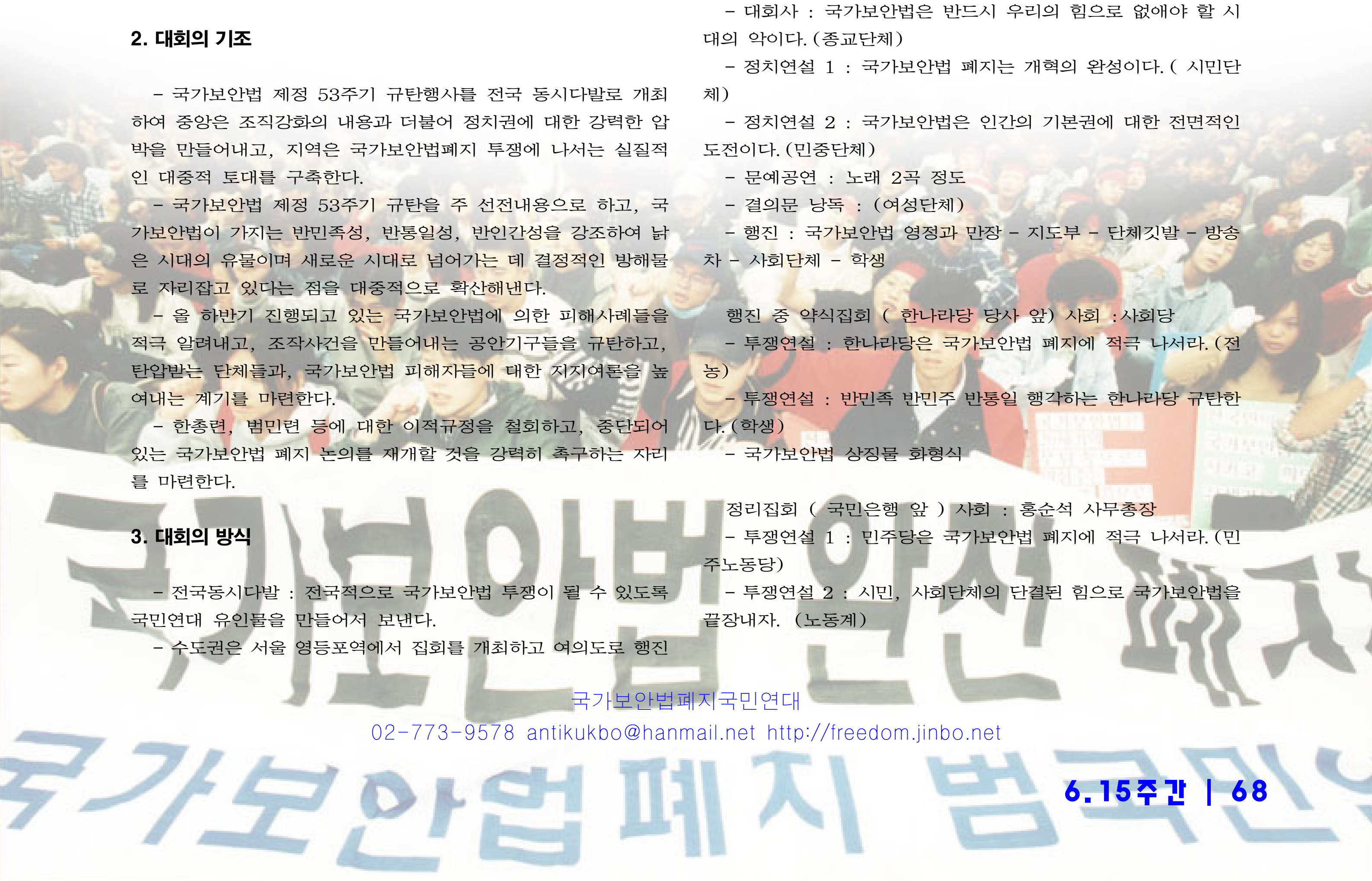
사전집회+문예공연 (30분) 사회자: 김국상 국민연대 사무국장
- 피해사례발표 1)진보의련사건, 2)자주민보사건, 3)한총련(진재영 내용결합하여)

본대회 사회자: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님을위한 행진곡
- 대회사 :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없애야 할 시대의 악이다.(종교단체)
- 정치연설 1 : 국가보안법 폐지는 개혁의 완성이다.(시민단체)
- 정치연설 2 :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민중단체)
- 문예공연 : 노래 2곡 정도
- 결의문 낭독 : (여성단체)
- 행진 : 국가보안법 영정과 만장 - 지도부 - 단체깃발 - 방송차 - 사회단체 - 학생

행진 중 약식집회 (한나라당 당사 앞) 사회 :사회당
- 투쟁연설 :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라.(전농)
- 투쟁연설 :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각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학생)
- 국가보안법 상징물 화형식

정리집회 (국민은행 앞) 사회 : 홍순석 사무총장
- 투쟁연설 1 :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라.(민주노동당)
- 투쟁연설 2 : 시민, 사회단체의 단결된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노동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02-773-9578 antikukbo@hanmail.net http://freedom.jinbo.net



길이 빛나라 개선문이여

혁명의 기나긴 세월 백두밀림 눈보라 헤쳐
광복의 기쁨을 안고 수령님은 개선하셨네
아- 빛나라 개선문이여 불멸의 기념비여
그날의 감격 역사에 새기며 높이 솟았네

항일의 혈전을 헤친 그 자국 여기 빛나고
조선의 앞길에 밝힌 그 ** 여기에 어려 있네
아- 빛나라 개선문이여 불멸의 기념비여
수령님의 그 위업 만대에 전하며 높이 솟았네

위대한 조선의 태양 맞이하던 그날처럼
온 세상 억만의 심장 우러러 영광드리네
아- 빛나라 개선문이여 불멸의 기념비여
찬란한 해와 별 영원히 받들고 길이 빛나라



주체 90, 11월 18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해직언론인 김모씨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지난 16일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방위비분담금, 아프가니스탄 의료지원 등에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 추곡수매가인하를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반발해서 전국 11개 교육대가 동맹휴업중인 가운데 5개 교대생들이 학교 본관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각계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킨 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한 보도들을 들어보면 회담이 결렬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 수석대표의 경거망동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방 실무자들이 합의하고 문안까지 다 정리해놓은 공동보도문을 전면부정하고 합의사항들을 일순간에 뒤집어버리고 돌아온 홍순영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당국이 이번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로 합의하고도 미국에서 있은 테러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은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외세와 공조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수 없다. 당국이 진정으로 6.15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실천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인 김모씨는 통일부장관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고 돌아온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측이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공모해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숱한 인명을 실은 비행기가 남북을 오가는 과정에 무슨 사건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는가. 당국의 말대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계조치를 취했다면 이산가족상봉도 마땅히 안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북측이 금강산에서 상봉하자고 제안한 것은 정말 백번 옳다. 그런데도 남측이 장소문제 등을 가지고 시비질하다가 회담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돌아온 것은 이산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찢는 반민족적, 반인도주의적 처사가 아닐수 없다. 이번 회담결과를 놓고 우리 이산가족들은 누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가를 깨닫게 됐다. 또 미국이 역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때마다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란다면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무산시킨 남측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평양에서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새로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외국인사들이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주체 90, 11월 19일

판문점에서 군복무를 생활을 한바 있는 퇴역장교 김모씨가 1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1만5,0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집회를 갖고 주5일근무제도입과 일방적인 구조조정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약분업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정치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전지검특수부는 충남경찰청 45살 홍모씨 등 4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8일 쿠바 정부경제대표단과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미국의 처사에 분격에 금치 못해 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이북민중의 정당한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11월 20일

광주시에 살고 있는 퇴직교수 김모씨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걸출한 사상이론가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무산 등에 항의해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0일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전국의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세워질 명지대교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전국연대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문제와 주한미군기지통폐합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등 현안문제가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맞게 합의된 데 대해 각계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교원노조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중에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부도업체는 늘고 신설된 법인수는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어음부도율 근황을 보면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지난 9월에 0.11%에서 0.2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도업체수도 414개로 6월에 비해 41개가 늘었습니다.

10월중 신설 법인수는 2,971개로 524개가 감소했습니다.

올들어 마약류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간다 철도노동자연맹은 9일 성명을 내고 당국이 통일애국인사들과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의 대학의 **교수와 작가 박경남씨 등 재일한국조선인 약 200명은 17일 ≪당장 전쟁을 걷어치우라.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이라는 선언을 발표함과 함께 고이즈미총리에게도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조선기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19일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기자동맹 제8차 대회가 19일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주재 세계보건기구대표부가 평양에 개설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정부와 쿠바 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1차회의 의정서가 19일 평양에서 조인됐습니다.

주체 90, 11월 21일

서울 시내 모대학 지하이념서클이 최근 이북에 대한 민중의 동경심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각광받는 이북사회의 우월성을 연구터득하기 위한 포럼을 가졌습니다.

범민련결성 11주년에 즈음해 범민련 북측본부와 남측본부, 해외본부가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무산 등에 항의해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0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반전활동가들이 다나까와현의 야마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주도의 군사적인 반테러캠페인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서울시민 10명가운데 7명이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 장갑차가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11월 19일자는 한국에서 내년 2월말의 대학졸업예정자가 취직난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새 졸업생의 취직률은 처음으로 50%를 밑돌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기자동맹 제8차 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일 폐막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예멘 준비위원회가 6일 사나에서 결성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나이지리아신문 ≪옵저버≫ 12일자가 게재했습니다.

민주콩고 신문 **** 7일자는 ≪조선민족사에 길이 빛날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17일자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난 17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세계화를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체 90, 11월 22일

지난 14일 서울에 있는 모대학교 지하이념서클이 **김정일**장군님의 정치관에 관한 심포지엄을 벌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소속 농민 1만여명은 21일 오후 1시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추곡수매가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차 남북장관급회담결렬과 관련해 20일부터 23일까지 수석대표인 홍순영통일부장관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한국에 자국산 전투기를 사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인상과 새로운 미군기지제공 등이 합의된 데 대해 지지하고 나서 국민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지난 18일 한 측근으로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 잘됐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소식에 접한 각계민중은 이회창이야말로 친미사대주의자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농의 한 관계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땅을 반환하는 대신 수십만평의 새토지를 빼앗아 미군기지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를 지지해나선 이회창은 국민의 이익도 모르는 얼빠진 자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미군이 돈한푼내지 않고 7,400여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회창이 모른단 말인가. 우리땅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회창이 새로운 미군기지를 위한 땅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지지해나선 것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용납못할 처사가 아닐수 없다. 이회창은 미국에 잘보여 대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꾀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짓이다. 이회창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회창은 미국의 앞잡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개가 아니면 어떻게 약탈적이고 매국배족적인 한미간의 합의를 지지해나설수가 있겠는가. 미국이 군사기지를 신설확장하고 미군의 영구주둔과 북침전쟁도발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것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전국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이회창은 국민도 민족도 모르는 반역자이다. 그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통일이 아니라 남북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본다. 전국민이 반이회창투쟁을 강력히 벌여 정계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형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회창과 같은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면서 이른바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고금을 해마다 늘려가며 약탈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고통련 사무국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채택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조선기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21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의 ≪로동신문≫ 22일자는 ≪라남의 봉화따라 강성부흥의 북소리 높이 울리자≫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과 몽골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15돌에 즈음해 이북 주재 몽골 대사관 성원들이 21일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

나이지리아신문 ≪챔피언≫ 11일자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선군정치의 위대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오키나와주민 30여명이 21일부터 일본자위대의 아프가니스탄파병에 항의해 34시간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주체 90, 11월 23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9일 논평을 발표해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는 반드시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훈련장의 추가공여와 관련해 지역환경단체들의 반대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영남대소속 한총련대의원들을 강제연행한 경찰의 탄압책동을 비난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소속 농민 50여명은 20일 오후 농협충북지부앞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쌀값폭락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협의회소속 인문대학장 220여명은 20일 서울대에서 회의를 열고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충남 태안군의 **시험장에서 사전거리100킬로미터의 미사일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구실로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가운데 미사일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훈련에 광분하면서 미국의 지원밑에 미사일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22일 당초 다음달 발행할 예정이였던 올해 국방백서를 내년 2월에 발행한다며 내년 국방백서에서도 북을 ≪주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같은 행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용납못할 처사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을 추종하고 있는 우익반통일세력들이 군부를 장악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한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될수 없고 6.15공동선언이행이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을 앞두고 미국의 ≪에프15케이≫ 구매압력이 노골화 된 가운데 미태평양사령부도 미국제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미군범죄자가 검찰기소직후 미국으로 달아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난과 주거환경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즈베끼스탄고통련은 15일 성명을 발표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채택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원한의 땅 신천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애국자들의 유해가 또다시 새로 발굴됐다고 22일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안건 토의시 이북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조총련 ≪조선신보≫사 사장일행이 22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라오스 부수상 겸 외무상이 14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남북사이의 내왕과 접촉, 이산가족교환방문 등 통일을 위해 전진적인 여러 사변들이 일어난 데 언급하면서 라오스정부는 이 사변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철학은 동지애≫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13일 콜롬비아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1월 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렬과 관련해 20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총련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결과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해 17일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쌀값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 농민중 일부가 이날 저녁 7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앞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가로막고 2시간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교조와 **노조 등 45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간부 10여명은 23일 정략적인 교원정년연장의 중단과 사립학교법개정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교원정년연장안의 국회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당론과 관계없이 자유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다음주초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당내 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당에 자유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소장파모임인 ≪미래연대≫도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교원정년연장문제 등 쟁점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여서 당내분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이회창의 독단과 독선 등에 대한 반발이 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발표 7주년에 즈음해 마다가스까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연합토론회가 안따나나리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베닌 평화문화교류센터 설립모임이 최근 베닌의 꼬또누에 있는 국제트로삐꼴공보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